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2019. 7.

류정곤 | 박상우 | 고동훈 |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류정곤	연구총괄, 제1장, 제6장 제1절
-----	--------------------

연구진

박상우	제4장, 제5장, 제6장 제2절
고동훈	제3장
윤영준	제2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박영범	농업네트워크 이사장
박정현	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박천일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빈부 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취약계층 일자리 부족, 지역공동체 붕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호혜성에 기초한 재분배 원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대안적 가치이자 공동체 전략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즉 공익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체제로서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서비스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1980년대 시장실패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안으로 채택되었고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2016~2030년)에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생산자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운동으로 일부 사회적 경제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도입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과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만으로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확산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사

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2016년 국회에 상정되었고 현재 2차 수정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은 18,606개이고, 이중 협동조합이 13,596개로 가장 많고 사회적 기업은 1,978개다.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은 15개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0.7%에 불과하나 매출액, 이익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사회적 기업 평균 수준을 넘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개 모두 해양수산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인증되었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인 수산자원 및 연안공간을 이용하는 사회·경제·문화적 공동체 및 풀뿌리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고 산업적·지역적 특성상 사회적 경제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활동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한 축이라 생각한다. 수산업·어촌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어촌고용 증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평한 소득분배 등 ‘나보다 우리를’,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수산연구본부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정책동향연구본부 박상우 부연구위원과 윤영준 연구원, 수산연구본부 고동훈 전문연구원이 공동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에 자문과 조



언을 해 주신 박영범 농업네트워크 이사장, 박정현 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및 해양수산부 박천일 사무관께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2019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주요 내용	6
2. 연구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11

제 2 장 사회적 경제 동향 분석 · 13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의의	13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13
2.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의 의의	19
3.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의 범위	23
제2절 사회적 경제 정책 동향	28
1. 부처별 동향	28
2. 지원정책별 동향	30
3. 지역별 동향	35
제3절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37
1.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37
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38

제 3 장 해외 및 국내 사례 · 43

제1절 해외 사례	43
1. 영국	44
2. 이탈리아	52
3. 스페인	59
4. 퀘백(캐나다)	65
제2절 국내 사례	70
1. 주요 부처별 정책사례	72
2. 수산업·어촌 분야 주요사례	76
제3절 시사점	82

제 4 장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제약요인 및 가능성 분석 · 87

제1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약 요인	87
1.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87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93
제2절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가능성 분석	98
1. 어촌의 사회적 자본	98
2.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107

제 5 장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113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13
1. 기본방향	113
2. 전략별 추진과제	116
제2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117
1.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117
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 지원	125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128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1

제1절 결론	131
제2절 정책제언	132
1.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종합계획 및 시범사업 추진	132
2.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추진	137
3. 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전국망 네트워크 구축	141
4.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 교육	142



참고문헌 · 143

표 목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	10
〈표 2-1〉 사회적 경제의 특징	16
〈표 2-2〉 사회적 경제의 정의	17
〈표 2-3〉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의 법안	18
〈표 2-4〉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24
〈표 2-5〉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24
〈표 2-6〉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25
〈표 2-7〉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27
〈표 2-8〉 부처별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지원정책	29
〈표 2-9〉 사회적 경제조직 자금 지원	31
〈표 2-10〉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I	33
〈표 2-11〉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II	34
〈표 2-12〉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 현황	36
〈표 2-13〉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2018)	37
〈표 2-14〉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39
〈표 2-15〉 수산업·어촌 관련 인증 사회적 기업(2018)	40
〈표 3-1〉 영국의 협동조합 법제	47
〈표 3-2〉 영국의 사회적 경제정책	49
〈표 3-3〉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유형	54
〈표 3-4〉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연합조직 유형 및 특징	55
〈표 3-5〉 주요 부처별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근거 법령/지침	73
〈표 3-6〉 수산 분야 주요 사회적 기업 및 특징	77

〈표 4-1〉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사업 비교	90
〈표 4-2〉 어가인구 고령화율(2013~2017년)	94
〈표 4-3〉 전통적 어촌공동체와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 비교	101
〈표 4-4〉 전통적 어촌공동체와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 비교	102
〈표 4-5〉 지구별 수협별 현황	105
〈표 4-6〉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년 투자내용	107
〈표 4-7〉 사회적 수산업 추진계획(안)	111
〈표 5-1〉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과제	117
〈표 5-2〉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안)	120
〈표 5-3〉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절차(안)	121
〈표 5-4〉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안)	127
〈표 5-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방안	128
〈표 5-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향	129
〈표 5-7〉 삶의 질 법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신설방안	130
〈표 6-1〉 거제 해금강 마을 및 벨리스 일자리 창출 내용	136
〈표 6-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절차(안)	140

그림 목차



〈그림 3-1〉 로치데일 최초 소비조합 상점(왼쪽) 및 로치데일의 입구(오른쪽)	45
〈그림 3-2〉 CES의 에너지 공급 분포	50
〈그림 3-3〉 글레넬그(Glenelg) 마을 페리	52
〈그림 3-4〉 리유니트 로고	56
〈그림 3-5〉 몬드라고 로고 및 홍보자료	61
〈그림 3-6〉 몬드라곤의 주요 10대 운영 원칙	63
〈그림 3-7〉 라파제다 홍보 자료	63
〈그림 3-8〉 데자르댕 로고(왼쪽) 및 본사(오른쪽)	68
〈그림 3-9〉 데자르댕 거버넌스 구조	68
〈그림 3-10〉 다운타운 데이케어 협동조합 홍보자료	69
〈그림 3-11〉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72
〈그림 3-12〉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정책	74
〈그림 3-13〉 농림부 2018년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정책	75
〈그림 3-14〉 고용노동부 2019년 정책 추진 방향	76
〈그림 3-15〉 바다의 향기 조직도	78
〈그림 3-16〉 아리울 수산 로고 및 주력 상품	79
〈그림 3-17〉 밸리스 홈페이지	80
〈그림 3-18〉 밸리스 주요 상품	81
〈그림 3-19〉 국내외 사회적 경제의 비교	84
〈그림 3-20〉 2018년 해양수산부의 업무추진계획	85
〈그림 4-1〉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92
〈그림 4-2〉 어촌계 연령대별 분포 현황(2017년 기준)	95
〈그림 4-3〉 어촌계수 및 평균계원수 추이(1978~2017년)	96

〈그림 4-4〉 어촌공동체 갈등원인 및 갈등주체 분포현황	97
〈그림 4-5〉 공동체의 인식 변화	99
〈그림 4-6〉 어촌계 분포현황	102
〈그림 4-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03
〈그림 4-8〉 지구별 수협	104
〈그림 4-9〉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모델	108
〈그림 4-10〉 어촌뉴딜 300사업 거버넌스(안)	109
〈그림 4-11〉 포용성장 정책	110
〈그림 5-1〉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 및 기존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병행 ...	114
〈그림 5-2〉 위계별 어촌형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안)	119
〈그림 5-3〉 제주 한림수협을 통한 어촌의 생활서비스 개선 예시	122
〈그림 5-4〉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123
〈그림 5-5〉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어촌 지역재생 지원	124
〈그림 6-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134
〈그림 6-2〉 고령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135
〈그림 6-3〉 충남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상생연금제도 사례	137
〈그림 6-4〉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2.0사업	138
〈그림 6-5〉 지역과 특성에 따른 어촌계 사례	139
〈그림 6-6〉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인증 및 인큐베이팅 절차	140
〈그림 6-7〉 어촌 사회적경제조직 전국망 네트워크	141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의 양극화 해소,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분야에 사회적 경제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문헌 조사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타 분야 사회적경제 관련 일반현황	• 국내외 연구보고서	•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논문 및 정책보고서	수립에 활용
현장 조사	• 타 분야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 도입 조건 및 가능성 분석	• 방문 조사	•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경제 도입 가능성 및 방향성 도출에 활용
해외 출장 조사	• 사회적경제 도입 및 활성화 관련 성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캐나다 퀘벡 방문 조사	• 캐나다 퀘벡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도입 당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전문가 자문	•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경제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향후 문제점 분석	• 워크숍 • 전문가 방문조사	• 국내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개념의 정립 및 도입 가능성,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문헌조사에 있어서는 타 분야의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고, 이를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였음
 - 현장조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국내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가능성과 도입 방향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음
 - 해외사례에 있어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된 주요 국가의 경우 관련 문헌을 통해 조사·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캐나다 퀘벡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제도를 도입할 당시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서 방문조사가 필요하였기에 실제 출장조사가 실시되었음.

- 또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 및 워크숍을 통해 국내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뿐만 아니라 수산업·어촌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등 워크숍이 활용되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사회적 경제’는 호혜성에 기초한 재분배 원리를 통해 국가와 시장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대안적 가치이자 공동체 전략으로 등장한 개념임
 - 동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체제는 공익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체제로서,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음
 -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제정 및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양적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나, 수산업분야에 정책적으로 추진된 실적은 기대 이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한 실정임
 - 2018년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은 총 18,606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중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13,596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978개임
 - 그러나 수산업·어촌 분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15개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나 매출액, 이익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 평균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 어촌의 사회적 자본 및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사회·경제·문화적 공동체 및 풀뿌리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의 특수성과 함께 동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회복과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정비,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 정책 시범도입 등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은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그러나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시 다음의 사항은 도입에 대한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원제도의 부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근거의 부재 및 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의 취약성

- 인식 부족: 지역공동체의 역량 및 공익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갈등 등
- ▶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4개의 기본방향과 3대 주요 전략 등을 제시함
- 4개 기본방향으로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과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유입 병행, 간접지원과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민간·지자체의 역할 강화, 부처 간 협업체제와 해양·수산분야의 차별성 확보를 제시함
-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민관 협업체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3대 주요 전략과 함께, 이에 따른 7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위계별 어촌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 - 거점단위 지역공동체 육성
	어촌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운영 - 해양수산부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제도 마련
	해양수산형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지원	- 어촌형 생활서비스 개선 - 로컬 씨푸드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국민 해양복지 강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중간지원조직 지정	-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 경영지원 -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및 인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2)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활동

- ▶ 수산업·어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부합 및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마련에 기여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어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 산업자본주의 발전 및 도시화로 인한 어촌의 노령화 및 양극화, 어촌공동화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해소하고 어촌의 삶의 질을 경제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음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Measures for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1. Purpose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while presenting measures to invigorate them. By doing so,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resolving polarization in fishing communities, creating job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and invigorating local communitie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y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Literature	• General status relevant to	• Domestic and foreign	• Utilizing for establishing

review	the social economy in other sector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 Analyzing laws and policy related to the invigoration of the social economy	research reports • Papers and policy reports	measures to invigorate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On-site investigation	• Analyzing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based on best practi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other sectors	• Visiting research	• Drawing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for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Business trip to overseas	• Analyzing successful cases relevant to the introduction and invigoration of social economy and deriving implications	• Visiting research to Quebec, Canada	• The case of Quebec served as a benchmark when Korea first introduced social enterprises
Expert consultation	• Analyzing potential problems in introducing and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ies industry	• Workshop • Visiting and interviewing experts	• Understanding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2) Feature

- ▶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ies industry,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m and measures to invigorate them.
- For literature review,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preceding studies relevant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economy in other sectors as well as invigoration measures. This analysis was utilized to present measures to invigorate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 On-site investigation consists of visiting research to best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Korea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erved as a basis for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its direction in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ies industry.
- Foreign cases were used to investigate and study relevant literature of major countries in which social economy has invigorated such as the UK, Italy and Spain. However, the study carried out a business trip to Quebec, Canada since it was a benchmark case when Korea had adopted social enterprise system.
- Having carried out visiting research and workshops targeting domestic experts,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urthermore, workshops were utilized to collect opinions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setting direction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3. Result

1) Summary

- ▶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emerged as an alternative value and communal strategy based on the principal of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while seeking to address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or market cannot solve

-
- The social economic system based on this concept is an economic framework in pursuit of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social value, while generating private interest. In addition, it means economic activities generating social value through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based on cooperation and self-support among members.
 - ▶ As the world is facing structural problems such as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job instability and aging, the importance of realizing social value as well as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 Having changed economic structures arising from low growth and low employmen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is evaluating the social economy as a new solution.
 - Furthermore, these countries strive to ensure various forms of economic activities by social economic enterprises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Such measures include enactment of laws relevant to the social economy and establishment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 systems.
 - ▶ Korea is also building a foundation for quantitative growth for nurturing social enterprises and its support by improving law and system, conducting pilot project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However, relevant policies in the fisheries sector have produced low outcome although the result showed better effect than expected.
 - As of 2018, a total of 18,606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re in operation in Korea. Among them, the number of the federation of cooperatives is the highest with 13,596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ollowed by 1,978 social enterprises.

-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is 15, accounting for a mere 0.7% of the total. Despite small in size, social enterprises in fisheries sector have produced higher effect than the average in terms of sales and job creation.
- ▶ Given social capital of fishing communities and changing policy environment of the governmen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is forecasted to increase.
- Fishing communities are serving a unique role as a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ty as well as a grassroots community. In addition, fishing communities are facing an increasing need for resuming and recovering social capital, calling for the adoption of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into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is increasingly higher following the changes of the government's policy environment. These changes includ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local close-knit living SOC and pilot introduction of measures for invigorating social fisheries industry.
- ▶ However, following elements are pointed as major limitations

in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 Lack of support system: Absence of legal ground for suppor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lack of support foundation for nurturing them
 - Lack of awareness: Shortage of awareness for capacity as well as public and social value of local communities and conflicts of local communities etc.
- The study proposes four basic directions and three major strategies for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ies industry.
- Four basic directions are as follows; nurturing grassroots communities and introducing exist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fisheries society, building a foundation for indirect support and ecosystem for growth, strengthening the role of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and forming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differentiating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from others
 -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major strategies; nurtur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operation system and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Along with these strategies, 7 implementation tasks and 15 specific tasks are suggested as follows

Strategy	Implementation Task	Specific Task
Nurturing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Building a hierarchical network of fishing community-oriented social economy	- Nurturing grassroots communities in fisheries society - Cultivating node-based local communities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 Opening and operating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social economy -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by MOF
	Supporting flagship projects for the social economy customized to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 Improving fishing community-oriented life services - Promoting local seafood and generating jobs for the youth - Enhancing maritime welfare service to the public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operation system	Designating intermediate supporting organizations	- Designating and operating specialized supporting organizations - Building a network of intermediate supporting organizations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 Managerial support - Education programs and PR support - Designation and certific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 Supporting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referential purchase
Improving legal system for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Amending relevant laws to invigorate the social economy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 Fisheries Cooperatives Act - Special Act on Support for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s well as adoption and invigoration measures applicable to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Thereby,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c data in suggesting policy measures for

major economic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cannot solve.

- ▶ It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levant to the social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fisheries industry by acting on a national task of ‘invigorating the social economy’ and proposing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By switching fisheries-oriented economic system to social economy, the study contributes to job creation and invigoration of the economy in fishing communities.
- ▶ Social economy enables solving problem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urbanization, such as aging, polarization and hollowing out of fishing communities,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in fishing village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 동력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통상 기업이라 하면 경제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는 하나 기업의 경제적 이윤극대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경제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체제는 공익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체제로서,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서비스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1900년경 프랑스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가 자본주의 경제를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즉, 빈부격차, 고용불안, 지역공동체 붕괴 등을 완화하여 시장경제가 더 사회적으로 공평한 체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 등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실패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고, EU는 2009년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하였고,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제정 및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 주 등은 이미 사회적 경제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생산자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운동으로 사회적 경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회계년도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1,877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194개이다. 2007년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 수는 55개에서 34배가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은 2,539명에서 41,417명으로 16배 늘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약 69%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2016년에 사회적 기업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볼 때 2018년 현재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은 총 18,606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중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13,596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978개이다.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은 15개로 0.7%에 불과하나 매출액, 이익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사회적 기업 평균 수준을 넘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개 모두 해양수산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인증되었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양적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나, 수산분야에 정책적으로 추진된 실적은 매우 미약하다. 해양수산분야에도 시장실패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일자리 부족, 공공 서비스 부족, 인구소멸,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실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어촌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촌계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에 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경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어촌계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 그 이상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유럽 선진 국가에 비하여 매우 추진이 저조한 실정이다. 즉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하다.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 수립·집행에 애로점이 있다는 평가다.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 및 실패 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어촌분야에서는 어촌지역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산업·어촌 진입 활성화, 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매우 미흡하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서는 수행되고 정책에 반영된 바 있으나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전무하여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가치 평가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부합 및 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목적은 어촌의 양극화 해소,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분야에 사회적 경제를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및 수산업·어촌 분야 실태를 파악하여 도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타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산업·어촌의 실태에 맞는 유형별 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 분야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 연구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가치와 사회적 경제 개념을 필요성과 함께 정립하였다. 그리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를 설정하여 사회적 경제 도입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나아가서 제2장에서는 수산업·어촌 분야 도입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타 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경제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사회적 경제 사례를 분석하여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고용노동부의 정책사례와 수산업·어촌 분야 2개의 사회적 기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산업·어촌 분야에 사회적 경제 도입 시의 제약요인과 도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약요인은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및 지원기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산업·어촌 분야의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도입이 가능한 이유를 어촌의 사회적 자본, 어촌사회의 사회적 경제 수요,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 등 정책과

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경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기반 구축, 수산업·어촌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해외출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논문 및 정책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활성화 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현장조사는 국내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도입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찾는데 활용하였다. 해외사례는 대부분 문헌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실제 출장조사는 캐나다 퀘벡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퀘벡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제도를 도입할 때 많이 참고하였던 사례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찾았다. 나아가서 수산업·어촌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찾는데 본 워크숍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는 등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특히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2007년 사회적 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는 더욱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뤄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문한 실정이다. 수산업 분야에는 사회적 경제 모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어촌공동체인 어촌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 몇 편만을 본 장에서는 검토하였고 주요 연구내용은 <표 1-1>과 같다.

첫 번째 선행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2011)’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선도적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사업 모델을 분석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 연구로서 유형별 모델개발에 활용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어촌이 아닌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에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2015)’이라는

연구로서 제주형 사회적 경제 기본구상과 제주도 사회적 경제 종합 발전계획 및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구상 및 로드맵 작성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도 어촌이나 수산업에 특화된 것이 아닌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2016)’라는 연구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남시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사례로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활성화 방안 주제별 역할 설정에 활용하였다. 다만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어촌이나 수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는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2017)’로서 농촌 사회적 경제의 이론 정립과 농촌 사회적 경제의 성공·장애 요인분석을 통한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개념 및 범위 설정과 제약요인 분석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도 그 대상이 농촌지역에 한정하여 어촌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못한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진단(2017)’이란 연구로서 사회적 경제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수산업·어촌 생태계 기반 조성 중 지원 조직 개선방안에 활용하였으나, 어촌의 특수 분야를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

여섯째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7)’로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업·어촌분야에 연구에 연구체제 및 방법론에서 많은 활용되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

제 목	주요 연구내용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2011)	농촌지역 선도적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모델 개선 방안을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2015)	사회적 경제 환경 변화와 전망, 제주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정책분석을 통하여 제주형 사회적 경제 기본구상과 제주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및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2016)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남시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사례로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을 제시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2017)	농촌 사회적 경제의 이론을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성공·장애 요인분석을 통한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진단(2017)	사회적 경제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전달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7)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사회적 경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수산업·어촌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어촌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개념은 무엇인지 등 매우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농업 및 농촌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다른 수산업·어촌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도입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제 2 장

사회적 경제 동향 분석

제 2 장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의의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1) 역사적 배경

‘사회적 경제’는 1830년 프랑스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예(Charles Dunoyer)가 처음 언급하였다. 초창기에는 일정하게 통일된 개념 없이 사회 영역의 경제 현상과 경제 영역의 사회 현상 모두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산업자본주의의 한계와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한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인간 삶의 문제를 호혜성에 기초한 재분배 원리를 통해 대응해나가려는 대안적 가치이자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공동체 전략으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기존 복지국가 모

텔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금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경험은 사회적 경제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하위 파트너가 아닌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개념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역사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시대별,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를 가진다. 하지만 호혜 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화,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뚜렷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군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의 특징

사회적 경제는 몇 가지 점에서 시장 경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 의사 결정방식에 의한 자율 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성원은 1인 1표 행사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 의사결정구조가 여타 조직에 비해서 더 민주적이며, 이를 통한 조직 운영 또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가치를 우선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경제 활동의 목적이 사적 이윤의 추구보다 공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부(富)의 창출 그 자체보다는 창출된 부의 사회적 활용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 이익 공유와 취약계층 부조,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데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의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가 지체해 버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현해 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책임이 필수 조건이면서 취약계층 당사자가 공동체를 구성해 연대·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 설정된 제3섹터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는 있으나 사적 이윤과 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이며, 시민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2-1〉 사회적 경제의 특징

키워드	특징
민주 / 자율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한 자율 경영
사회통합	사회적 가치 우선 추구, 창출된 부(富)의 사회적 활용
연대 / 협력	사회적 책임이 필수적, 당사자들의 자구적 연대·협력 경제
제3섹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 설정된 제3섹터

자료: 저자 작성

3)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적 개념이라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다양하게 표현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

하였다.¹⁾

벨기에 왈론 사회적 경제 위원회(CWES, Conseil Wallon de l' Economie Sociale)는 구성원 혹은 공익을 위한다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 활동이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했다(Defourny & Nyssens, 2006: 30; 신명호, 2009: 5-8).

유럽위원회는 공동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한 기업들의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를 사회적 경제의 정의로 채택하였다.²⁾

신명호(2009)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경제활동 조직들의 집합³⁾이 사회적 경제라 정의하였다. 장원봉은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폭넓은 시민사회 주도성과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호혜와 연대의 상호주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 사회적 개입전략이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하였다.⁴⁾

〈표 2-2〉 사회적 경제의 정의

구분	정의
OECD ¹⁾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되어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1) OECD, Social Economy: Buli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Paris, 2007 : Noya A. & Clarence E., "Improving social inclusion at the local level through the social economy", working document, CFE/LEED(2008)9/REV1, OECD, p.9, 2008. 재인용.

2)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2009, p. 15.

3)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2009, p. 29.

4) 장원봉,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 제409호, 2015, p. 5.

구분	정의
CWES ²⁾	구성원공익을 위한 목표, 경영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사람·노동 중시의 4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
유럽위원회 ³⁾	공동육구를 가진 이들이 그들을 위해 구성된 기업들의 이해당사자 경제
신명호 ⁴⁾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경제활동 조직들의 집합
장원봉 ⁵⁾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참여주의 모델로, 호혜·연대의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

자료: 1) OECD, Social Economy: Buli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Paris, 2007

2) Defourny & Nyssens,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Defining social enterprise, M. Nyssens(ed.), NY: Routledge, p.30, 2006.

3)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p.15, 2009.

4)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p.29, 2009.

5) 장원봉,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 제409호, p.5, 2015.

4) 법적 정의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 법안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법안의 취지 및 사회적 경제의 법적 정의를 살펴본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6년 10월 발의되었다. 법안의 발의 제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다.⁵⁾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목표는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있으며, 기본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있다.

5)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002616),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6.10.11.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법적 정의는 크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는 두 가지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사회적 경제의 활동방식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지향은 사회적 경제의 활동목적에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운영원리라 할 수 있다.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사회적 경제의 구현체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본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 자율·투명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노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우선 사용,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등 책무를 가지고 있다.

〈표 2-3〉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의 법안

구분	내용
목적	(제1조)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정의	(제2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기본원칙	(제3조) 사회적 가치 실현,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노력, 발생 이윤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사회적 경제조직 상호 간 협력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가 : 종합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지자체 : 국가 시책 및 지역 특성 고려해 필요 시책 강구

자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002616)(검색일: 2019. 01. 16.), 저자 재구성

2.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의의

1)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가치

지금까지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 수산자원의 생산·유통·가공·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산업적 가치와 기능이 중요시되어 왔다. 어촌 역시 수산업을 위한 어항의 배후공간이자 어업인의 단순 정주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산업·어촌 분야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산업·어촌 분야는 여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수급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안과 도서에 위치한 다수의 어촌은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영해 침범, 밀수, 밀입국 등 여러 주권위협행위로부터 영토를 수호하는 최선봉의 기능을 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각종 해상조난 시 구조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둘째, 수산업·어촌 분야는 지역공동체와 전통문화를 보호·유지·전승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촌에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 어법, 어구 등 다양한 어업유산이 존재하며 이를 계승해나가고 있는 명인들도 있다. 비단 수산업뿐만 아니라 국토에 골고루 분산되어 소재한 어촌은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의 하나다. 또한 어촌은 어장 운영 방식의 시장화에 따라 자본에 의해 잠식된 바가 적지 않지만, 사회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어촌 구성원의 동질적이고 전인격적 유대와 공동체의식을 상징하는 사회문화적 통합체로서 기능한다.⁶⁾

셋째, 수산업·어촌 분야는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시킨다. 해수욕장, 체험마을, 레저관광, 트래킹 등 다양한 관광은 바다와 어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휴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매결연, 귀어귀촌 등의 크고 작은 교류를 통해 공동화 방지 및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넷째, 수산업·어촌 분야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가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공동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자생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장과 연안의 정화 활동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 분야는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생명산업의 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필요성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산업·어촌 분야는 다양한 공적 가치들을 지녔으나 잠재성을 표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 사회적 경제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같은 해 도시 6.7점, 농촌 5.8점과의 격차가 크다.⁷⁾

6) 김준(2004),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pp. 45~74.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제3차년도), p133~157.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여러 정책 부문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⁸⁾

그러나 정부의 정책 한계 또한 존재한다.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은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가최소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항목 및 기준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소멸은 어촌 지역 소멸 및 공동화의 위기⁹⁾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의 이익 공유와 취약계층 부조,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도입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에 의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어촌지역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분야에 도입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어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함양되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해소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8) 2018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계획 상의 투융자 금액은 11조 5,073억 원으로 2017년 투융자 금액 10조 9,069억 원 대비 5.5%가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2018, pp. 4~39.

9)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대비 20~39세 여성 비율)를 살펴보면 소멸 고위험(0.2미만) 어촌지역은 2015년 131개소(전체의 31.1%)에서 2045년 342개소(8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류정곤·황재화·이상규(2018),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75~76.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고용 증대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반 경제조직에 비해 취업유발효과¹⁰⁾가 높으며, 창출 이익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비교적 건전한 노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조직문화는 구성원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해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업생존율 또한 높다. 일례로, 창업 후 3년이 경과된 일반기업의 생존율이 38.2%에 그치는 데 반해 3년이 경과한 인증 사회적 기업의 91.8%, 등록 사회적협동조합의 99.2%가 생존하여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6). 또한 여성, 은퇴자, 고령자, 장애인 등 어촌사회 내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케 해 새로운 일자리에 다양한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수산업·어촌 분야의 현안과 사회적 문제 해소 효과이다. 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촌의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산업·어촌 분야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구성될 경우 해당 분야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도 가능하다.

10) 산출액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산업이 12.9명인 데 비해 협동조합은 38.2명에 이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p6.

셋째,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참여모델인 사회적 경제는 소멸해가는 어촌의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북돋아 장기적으로 주민 결속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어촌사회 공동체의 문화 복원과 신뢰관계 회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3.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범위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크게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를 개별 협동조합과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지칭한다.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은 다시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은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해당되며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 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다. 또한 8조에 따라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

〈표 2-4〉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 경제조직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농어업법인, 농어업조합, 농어업회사, 농어업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법인 및 단체

자료: 저자 작성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다.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특성으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2-5〉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영리	비영리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인가
사업	제한 없음	공익 40% 이상
경영 공시	조합원 200인 이상 혹은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의무	의무사항
배당	가능	금지
법정적립금	잉여의 10% 이상	잉여의 30% 이상
청산	정관에 의함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감독	상법 등 준용	필요 시 기획재정부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취소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p. 4. 저자 재구성

사회적 기업이 인증제이며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비영리 조직이다.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비율을 적용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증진사업의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이 40% 이상이면 된다. 사회적 기업이 1인 이상의 유급 고용이 필요한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유급 기준 없이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면 된다.

〈표 2-6〉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영리, 비영리	비영리
제도	인증제	인가제
인증인가 판단기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비율	공익사업이 전체 사업 40% 이상
유급 고용	1인 이상	제한 없음. 5인 이상 조합원
이윤 배분 및 처리	영리 경우 이윤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의무	이윤 배분 금지 잉여 30% 이상 적립 의무
업종제한	없음	금융, 보험 제외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p. 5. 저자 재구성

마을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혹은 단체가 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읍면 단위를 범위로 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면 지정될 수 있다.

자활기업은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조합 혹은 공동사업자 형태로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공동창업모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업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역시 이에 근거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공통분모를 제외하고서 수산업·어촌 분야에 보다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조직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내리는 사회적 경제조직 가운데 수산업·어촌 분야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 회사, 어업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다. 이 조직들은 그 목적이 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어촌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어업인 및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 조직으로 간주되어 개별 협동조합으로 인식되지만, 수산업·어촌 분야 고유의 조직인 어촌계의 성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조직할 수 있다. 어촌계는 어업면허 우선권을 가지는 주체로, 그 법률적 근거는 1962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고 있으나 역사적 배경은 일제 치하의 어업령 공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 시대 이전까지 이른다.¹¹⁾

11) 농림수산식품부(2010), 일선수협 발전과 연계한 어촌계 선진화 방안 연구, p3.

어촌계는 단순히 수산업협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경제조직의 성격을 갖는 점 이외에도 어촌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촌계는 어업의 물적 기반이 없는 영세 어업인을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연안어장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공하여 물적 생활터전을 부여하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한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¹²⁾ 따라서 어촌계는 어업인들의 어촌생활 영위의 장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수산업·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영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와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의 원형으로서의 어촌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법 조항
법인·조합, 회사, 어업법인, 비영리단체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자료: 저자 작성

12) 김희재(2016), 어촌계를 통해서 본 어촌문화의 재발견, 동북아문화연구 제46집, pp. 63~66.

제2절 사회적 경제 정책 동향

1. 부처별 동향

고용노동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역별 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총괄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가 담당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중간조직을 담당한다. 사업의 집행은 각 시도, 시군구가 수행하며 지역의 중간조직은 광역단위의 지원조직이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활력제고 사업으로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¹³⁾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정책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가 담당하고 농어촌공사가 전국중간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집행은 각 시도, 시군구가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경제활동을 하는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2011년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단체육성을 위한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을 재변경하였다. 마을기업 정책총괄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며, 사업 집행은 각 시도, 시군구가 담당한다.

13) 농림축산식품부(2011), pp. 3~37.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 정책총괄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가 담당하며 전국중간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담당한다. 사업집행은 각 시도, 시군구가 수행하고 지역 중간조직으로 광역 단위 지원조직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도모하는 자활기업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하였다. 2000년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하던 것을 기업의 형태로 전환해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자의 근로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다.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가 담당하며, 전국 중간조직은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한다. 사업의 집행은 각 시도, 시군구가 담당하며 지역 중간조직으로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의 자활센터가 있다.

〈표 2-8〉 부처별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지원정책

구분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농어촌 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시행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목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소득창출, 지역활력	소득창출, 일자리	소득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 제고, 일자리
사업대상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취약계층
지원내용	인건비, 컨설팅, 세제, 시설비, 권역별 통합지원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지원	자문, 종합컨설팅, 사업비, 판로, HACCP 인증 지원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지원	창업지원, 융자, 사업 우선위탁, 판로, 인건비 지원

자료: 안전행정부,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체계 진단, 2013, pp.35~39.

2. 지원정책별 동향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크게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금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18년 현재 22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관련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취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내용은 주로 경영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업 보증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100억 원의 전용자금을 편성했다.

특화보증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기업당 1억 원의 보증한도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신용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 한도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표 2-9〉 사회적 경제조직 자금 지원

지원 사업	사업개요	관계기관
일자리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자금 지원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선택 지원	근로복지공단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대상 공제금 적립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주력산업 기술개발, 융복합 R&D, 연고산업 풀뿌리 기업육성, 주력산업 비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수출기업 기술개발,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사업	제품서비스화, 신규서비스창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식품업체 대상 HACCP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 50% 무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식육가공업체 대상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50% 국고 무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별, 단계별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 지원	협의회 별 중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조달 참여 기업 보증료 부담완화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지원	신기술사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지원	담보능력 부족 기업 대상 신용보증서 제공	신용보증기금
특화보증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지원 사업	사업개요	관계기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및 영리협동조합포함)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특례보증신용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미소금융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 구입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운영자금	제품·반제품·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산재예방 시설자금융자	사업장 당 10억 원 한도 융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지원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 지원	전자파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pp. 8~69.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8년 현재 13개 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다. 사업 내용은 경영컨설팅과 전문상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역량별로 1~5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판로, 네트워크 등을 연계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예비 혹은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회, 최대 6개월 간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표 2-10〉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 사업	사업개요	관계기관
원스톱기업애로종합 지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 경영애로 무료 종합상담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특화형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평생교육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협업 및 공동사업 소요 비용지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정보화, 가족기업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신용관리 컨설팅(CRC)	신용위험관리 기업 지원 컨설팅	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PL 및 손해공제 공동보험 가입	동일업종 조합(단체) 대상 보상한도 공유하는 PL 단체보험 가입 지원	파란우산공제
(예비)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일반경영교육 및 개별사업 기반 업종특화 교육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임원교육	마케팅, 판로, 정부부처 지원제도, 네트워크 구축 등 경영역량 향상 교육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협동조합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교육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및 현장코칭 운영	전문상담과 방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현안 해결 및 사업역량 강화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pp. 72~89.

3) 홍보 및 판로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은 2018년 현재 11개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소공인, 동네슈퍼, 협동조합이다. 사업 내용은 제품 우선구매, 상품경쟁력 강화, 유통·마케팅, 협업화 지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협동조합 상품물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품의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상품 패키지 및 홍보 디자인 개선과 유통채널 연계 및 상품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다.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슈퍼 연합회와 지역 슈퍼조합의 협업화 지원, 물류센터의 배송체계 확대를 위해 협업사업 운영 시스템 개발, 공동브랜드 및 PB상품 개발, 공동구매·마케팅 등 협업 사업 운영역량 강화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표 2-11〉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 사업	사업개요	관계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우선구매제도 확산 정책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코칭·개선, 연계·홍보 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중소기업 제조상품 브랜드 인증 통해 판로개척 및 확대	서울산업 진흥원
직접생산 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마케팅 역량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매장 입점 지원, 오프라인 기획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소공인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동네슈퍼에 대해 협동조합 중심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도, 상품배송 협업활동 기반 조성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 사업	사업개요	관계기관
중소기업 명품마루업체	중소기업명품마루 입점 희망 업체 전시판매 지원	코레일 관광개발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품기술서 접수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기술서 상시접수로 유통채널 수요에 맞는 판로 지원 연계 추진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협동조합 상품 유통채널 입점 연계 및 협동조합 상품 DB 구축 관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상품물 운영	협동조합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안내로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pp. 92~117.

3. 지역별 동향

지방정부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반면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충청남도는 지원 정책의 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전라남도는 수산업·어촌 분야 관련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도내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억 원 이내 한도로 현대화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고 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은 도내 생산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TV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2〉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 현황

지역	사업 수	지원 분야
서울	14	경영 지원, 협동조합지원센터, 자금 지원, 기술상용화 지원, 혁신성장 지원, 민간단체 공모, 홍보 사업, 맞춤형 컨설팅, 사회투자기금 대출
부산	2	신용보증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구	6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해외시장 정보, 해외출장지원, 기업애로상담, 기업인턴
인천	14	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보증,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화 지원, 수출지원, 기숙사 지원, 제작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홍보 지원,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단 운영, 특례보증
광주	1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전	7	기업도우미제, 협동조합지원센터, 창업 및 자금 지원, 박람회 참가, 신규기업 모집, 판매 지원,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울산	1	산업재산권-인증 지원
경기	20	금융 지원, 협동조합 지원, 공공플랫폼 수탁이용 지원, 창업 지원, 경영환경개선, 기업 컨설팅, 환경기업 지원, 초고속사업화 지원, 기술닥터사업, 판로 지원, 입점 사업, 품질경영 개선지원, 생태계 구축 협동화사업
강원	22	홍보 제작, 디자인 개발, 입점지원, 융자금 보전, SW성장지원, 서비스센터, 수출지원, 교육컨설팅, 자금 지원, 기업 공모, 찾아가는 협동조합, 판로 지원, 직거래장터, 현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보증지원, 박람회참가지원
충남	2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충북	7	산업디자인 개발, 메인비즈 인증획득, 통번역, 홈쇼핑, 박람회 참가, 직무향상 현장교육, 사회적 경제기금 호혜담보대출
전남	13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 통상닥터, 수출지원, 기업애로 상담, 기업 육성, 인증 지원, 시장개척단, 청년근속근로장려금,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시제품제작 지원
전북	6	경영개선 컨설팅, 협동조합 컨설팅, 자금 지원
경남	5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 기업애로 무료상담, 박람회 참가,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경북	8	경영기술 컨설팅, 사업자금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박람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통번역, 해외시장조사, 산업디자인 지원
제주	8	보험료지원, 디자인개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기능강화, 학습동아리 지원, 판매지원,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투자비용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제3절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1.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2018년 6월 현재 전국의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은 18,60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이 13,596개소로 가장 많으며, 사회적 기업은 1,978개소, 자활기업이 1,518개소, 마을기업이 1,514개소가 운영 중이다.

〈표 2-13〉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2018)

단위 : 개소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수
사회적 기업	1,978
협동조합	13,596
마을기업	1,514
자활기업	1,518
전체	18,606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p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인증한 2018년 사회적기업 리스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14) 일반 협동조합은 2013년 3,042개가 설립되었으나 2016년에는 1,961개소가 설립된 데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3개소, 2014년 122개소, 2015년 180개소, 2016년 203개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검색. 2018년 12월 27일 검색.

40%가 지역문제 해결이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은 전국자활협회의 5대 표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청소소독이 20.6%를 차지하고 있다.¹⁵⁾

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2018년 6월 현재 수산업·어촌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은 15개소로 전체 인증 사회적 기업 1,978개의 0.7%에 불과하다.¹⁶⁾ 그러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고용성과 등을 비교해 보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줘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2017년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의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의 재정성과는 매출액 20억 원, 영업이익 2,200만 원, 당기 순이익 3,600만 원이며, 고용인원 20명, 취약계층 고용 12명이다. 이는 당해 연도 전체 사회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103%, 영업이익 224%, 당기순이익 7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고용인원 87%, 취약계층 고용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수산업·어촌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 15개소 가운데 14개소는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지원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개발 비용, 사회보험료,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 지원된다.

2017년 수산업·어촌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의 공공지원금 평균금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 2018. 12. 27)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 2018. 12. 27)

액은 8,400만 원으로 전체 인증 사회적 기업의 공공지원금 평균금액 4억 7,600만 원의 17.6%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4〉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단위 : 천원, 명, %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	평균 고용인원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
해양·수산 분야 사회적 기업	2,000,265	21,877	36,100	20	12
전체 사회적 기업	1,940,604	9,754	50,033	23	14
해양·수산/전체	103.1	224.3	72.2	87.0	85.7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p. 7., 저자 재구성

2018년 현재 수산업·어촌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은 15개소이나, 수산업·어촌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 기업은 31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는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영어조합법인 등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경영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24개소로 전체의 77.4%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5개소이다. 사업내용은 수산물의 제조·가공·직거래 등 유통 판매 사업이 가장 일반적이다.

〈표 2-15〉 수산업·어촌 관련 인증 사회적 기업(2018)

단위: 개소

지역	인증 사회적 기업 수	주요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강원	3	수산물 판매, 어촌체험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경기	3	수산물직거래, 어촌체험	일자리제공형
경북	3	수산물 가공, 해수면 관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부산	1	수산물 판매	일자리제공형
서울	2	수산물 도·소매	일자리제공형, 기타
인천	3	수산물 도·소매, 가공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전남	4	공동양식, 어로공동작업, 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	일자리제공형
전북	5	수산물 가공·유통	일자리제공형
제주	3	수산물 가공, 도·소매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충남	3	수산물 가공, 도·소매	일자리제공형
충북	1	어촌유학	일자리제공형
합계	31	-	-

주: 2018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18. 12. 27.)

수산업·어촌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¹⁷⁾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현재 6개소이다. 2013년에는 홍합 종묘(채묘) 육성 사업, 홍합 유통판매 및 가공, 홍합 기자재 판매 등을 하는 홍합양식 사회적협동조합, 2015년에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식량주권을 연계해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충남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과 어장환경 복원 및 유류피해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한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6년에는 지역 수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흥

17)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 참조. 2019년 1월 12일 검색.

청정마루 사회적협동조합과 서부발전 주변지역 어장환경복원 및 피해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원이소어업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8년에는 저수지 수면 활용 태양광발전사업과 지역특산물 판매, 어업인력 무료매칭사업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 3 장

해외 및 국내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제 3 장

해외 각 국의 사회적 경제는 나라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등장배경이 존재해 왔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이 다변화 되어 왔다. 사회적 경제는 과거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계층 간 갈등 및 양극화의 문제, 실업문제, 그리고 근현대 에 이르러서는 저출산, 고령화, 소외계층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포함한 새롭고 다변화된 사회의 관심과 이슈 속에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최근까지 각광을 받아 왔다. 즉, 정부 또는 시장이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불리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또한 이를 통한 고용과 복지의 동시 해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온 것이다.¹⁸⁾

해외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은 1990년대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가 가져왔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영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러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형태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¹⁹⁾ 시기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가 근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한 유럽과 캐나다 등 사회적 경제가 비교적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각국이 처해 왔던 다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사회적 경제 기구를 육성·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사회적 경제 배경,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비교·분석하였고,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각국에 존재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구의 주요 성공 사례에 대해 보다 심화된 조사를 실시하였다.²⁰⁾

1. 영국

1) 사회적 경제 배경

영국의 사회적 경제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으로 알려진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²¹⁾ 산업혁명

18) 남승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16, 공공사회연구, 6(4), pp. 47-75.

19) 박경철 외, 「자율관리기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 2013, 충남발전연구원, p. 3

20) 남승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2016, 공공사회연구, 6(4), pp. 48.

21) Redian (검색일 : 2018. 12. 22)

이후 영국 자본가와 노동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28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한 점포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협동조합의 효시로 인식되고 있다.²²⁾

〈그림 3-1〉 로치데일 최초 소비조합 상점(왼쪽) 및 로치데일의 입구(오른쪽)



자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검색일: 2018.12.22.)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요인에는 로치데일이 세운 두 개의 주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첫 번째 원칙으로서 '좋은 물건을 공급하되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진 않더라도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인데, 이러한 원칙하에 이루어졌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은 이후 소비자협동조합의 일반원칙이 되었다. 두 번째 원칙으로서 로치데일의 이른 바 '이용배당' 원칙을 들 수 있다. 로치데일은 조합원이 받는 연말 배당금액이 1년 동안 동 조합원이 로치데일 가게로부터

22)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15

구입한 상품의 구매실적에 비례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는 조합원이 로치데일 가게를 많이 이용할수록 연말에 더 많은 배당금액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투자액 또는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이 결정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로치데일의 배당금 배분 구조에 있어 이러한 로치데일의 이용배당 원칙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이용할수록 배당금을 많이 돌려받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기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새 조합원을 불러들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로치데일은 조합원의 편익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 원칙 하에 동 조합이 시행해 왔던 각종 사업은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²³⁾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영국의 사회적 경제 발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이러한 요인에는 (i) 사회운동과 캠페인 그리고 (ii) 자선 및 박애주의 운동이 포함된다. 전자의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농촌 및 도시 환경에서의 기회 부족에 대응하여 일어났던 1970년대 스코틀랜드지역 사회 기업 운동과, 1960년대 노동자 계층으로 구성된 지역 중심부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항의로 설립된 웨스트웨이 신탁(Westway Trust)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후자의 요인에는 불우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력 구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조합, 지역사회 상점(community shop), 개발 신탁 및 지역사회 비즈니스 운동 등이 포함된다.²⁴⁾

23) 한겨레신문 (검색일 : 2019. 01. 15)

24) 국제노동브리프 (검색일 : 2019. 01. 15)

2) 사회적 경제 법·제도

영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각기 다른 기구 및 법령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 협동조합에 대한 영국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관리 권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사법의 적용, 그리고 자선단체 및 산업공제조합에 대한 자선단체위원회의 규제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²⁵⁾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영국은 1852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법 제정을 시작으로, 1865년 산업공제조합법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우애조합법의 개정, 산업공동소유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회사법 등이 이러한 협동조합의 법제 속에 포함되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3-1〉 영국의 협동조합 법제

연도	내용
1965	산업공제조합법(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제정
1971	우애조합법(Friendly Societies Act) 개정
1976	산업공동소유법(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
1979	신용협동조합법(Credit Union Act)
1985	회사법(Companies Act) 및 관계 법령

자료: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18

김태완 외, 「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합동조사단 국외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 5

25)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16-17

3) 사회적 경제 정책

영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유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되는 지역개발형,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형태로 육성되는 기업육성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반드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후자인 상법상 기업 육성형도 지역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주력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정책으로는 또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개발기구(CDA) 및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기구를 통해 마련된 다양한 기금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영국은 취약 지역에 기반을 둔 영리 및 비영리 사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투자 세액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Credit)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투자 세금감면(CITR: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²⁶⁾ 이외에도 영국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정부에 의한 공공수주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6)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18-19

〈표 3-2〉 영국의 사회적 경제정책

구분	주요 내용
육성유형	- 지역개발형(협동조합 중심) - 기업육성형
특징	-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2010년 사회적 기업 약 62,000 개) 2009년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 약 1,122 개 - 지역사회개발에 집중
법/제도	- 회사법: 산업공제조합(IPS) 지위 부여 - 공동체이익회사법: 지역 NPO에게 상법상 지위 부여 - 기타: 우애조합법, 자선사업법 등
지원방법	- 세금우대, 자금조달지원 (세금우대) 회원출자, 지역기업투자 유치 (자금조달지원) 은행 및 협동조합개발기구(CDA)로부터의 자금의 다양성 조성 (예: 형성지원금, 훈련지원금, 운영지원금, 고용지원금, 자본지원금 등) -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공공수주 프로그램 운영 등

자료: 이철선(2013), 해외 3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분석을 위한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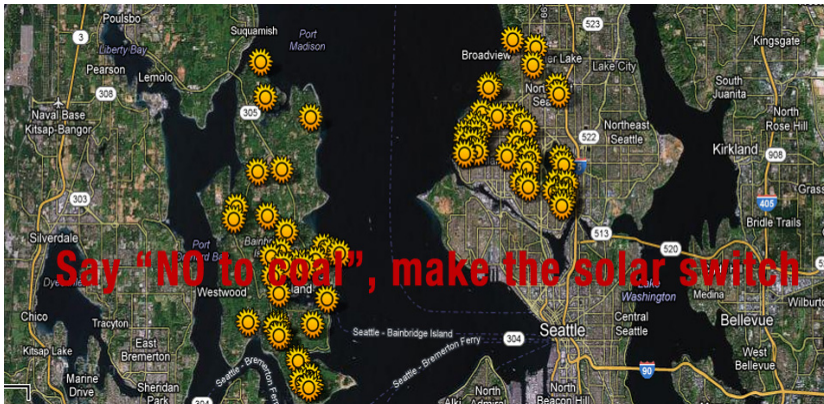
4) 사회적 경제 조직

(1) 커뮤니티 에너지 솔루션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360만 여 가구가 천연가스를 이용해 왔으나, 천연가스는 이용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또한 높아 경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커뮤니티 에너지 솔루션(Community Energy Solution; CES)이란 사회적 기업이 2006년에 출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CES는 에너지빈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North East 지역과 Yorkshire & Humber 지역에 가스공급을 위한 본관 등의 인프라 설치 및 각종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27) 이로 인해 동 지역의 거주민들은 적정시기에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되어 기존 천연가스 가격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다.

〈그림 3-2〉 CES의 에너지 공급 분포



자료: CES 홈페이지(검색일: 2018.12.16.)

최근 CES에 대한 영국 정부의 초기 자금지원은 종료가 되었으나, CES는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약 3만 채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이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성의 문제로 동 시스템과 관련한 정부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않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CES와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설립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7) 세계도시뉴스 (검색일 : 2019. 01. 14)

(2) ISFCIC

스코틀랜드 북서쪽 글레넬그(Glenelg) 마을은 인근 마을 및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까지 약 48km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적응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은 인근 마을의 왕래를 위해 과거부터 페리(ferry)를 이용해 왔고, 또한 이러한 페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경제·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페리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수익성의 문제로 이를 처분하고 폐업을 결정하게 되자, 만약 페리를 운영할 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한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06년 마을공동체는 이를 위해 마을 간 페리의 지속적 운영을 목적으로, 또한 마을주민들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ISFCIC(Isle of Skye Ferry 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설립하게 되었다.²⁸⁾

페리 사용에 대한 기존 페리 소유권자와의 임대계약에서 출발한 ISFCIC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페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마을 간 왕래가 용이해 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위원이 되어 사업 운영에 있어 높은 수준의 관리·책임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동 사업의 주된 수입은 차량 선적료를 포함한 승객이용료이며, 마을의 주민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관광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28) 세계도시뉴스(검색일 : 2019. 01. 14)

〈그림 3-3〉 글레넬그(Glenelg) 마을 페리



자료: Scotland Alba 홈페이지(검색일: 2018.12.16.)

2. 이탈리아

1) 사회적 경제 배경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태동하여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를 향상하고, 이러한 계층의 고용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²⁹⁾ 따라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명칭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과 낮은 국민소득,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1970년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³⁰⁾

29) 김태완 외, “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합동조사단 국외출장보고서”,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30)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1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은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공급의 위탁을 맡게 됨으로서 시작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복지예산이 현금 이전에 집중되고, 이로 인해 비영리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 활동을 확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비영리조직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탁하게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³¹⁾

2) 사회적 경제 법·제도

이탈리아에서는 비영리 섹터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표준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기존의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회계, 고용조건, 기금모금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³²⁾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 사업체는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s)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45조³³⁾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로서 1992년에 제정된 1992년 Law 381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유형을 근로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법인조합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조합원 유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31)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2

32)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0-21

33) 헌법 제45조에서는 '공화국은 비투기적인 본성을 지니며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헌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적정한 감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3〉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유형

조합원 유형	내용
근로자	금전이나 서비스 등의 형태로 보상받는 참여자
소비자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자
자원봉사자	보상이 없는 자발적·개별적 협동조합 참여자(협동조합 전체직원의 50% 미만)
후원자	자본 기여자로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경영 전반에 제한적 참여 권한이 부여된 자
법인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소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 법인

자료: 김태완 외, “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협동조합단 국외출장 보고서”,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 저자 재구성

또한 이탈리아에는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수 등과 관련한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조합원,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15인 이상, 기타의 협동조합의 경우 9인 이상의 조합원 수 확보를 조합의 설립 기준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정책

이탈리아 정부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Agenzia per le ONLUS(비영리협회지원기관)라는 전담기구가 있으며, 동 기구에서는 제3섹터 조직 및 비영리조직의 육성 및 감독을 주 업무로 하여, 연구업무, 관련 법령 입법, 홍보 및 캠페인,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 정책에 있어 주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들을 총괄하는 연합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레가코프(LegaCoop), 협동조합연합(CCI), 협동조합총연합(AGCI) 및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UNCI) 등이 포함된 이

러한 협동조합 연합조직들은 대정부 교섭 등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약 50%가 이러한 연합조직에 소속되어 있다.³⁴⁾

〈표 3-4〉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연합조직 유형 및 특징

연합조직 유형	특징
레가코프	1886년 설립. 급진·진보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1919년 설립. 가톨릭에 기반을 둔 정당의 지원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강한 연대 관계 형성
협동조합 총연합	1952년 레가코프에서 독립하여 사회민주당, 협화당 및 자유당계의 연합으로 구성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	1975년 인가, 가톨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남부·시칠리아·북동부 등지에서 농업 및 건축업 등에 주력

자료: 김태완 외(2012), “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협동조사단 국외출장보고서”,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 저자 재구성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세율은 일반 기업체에게 부과되는 법인소득세(약 37%) 및 지방소득세(약 16%) 보다 낮게 적용되며, 해당 등으로 조합원에게 환원해 주는 금액이 부가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사료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조합원이 공급하는 농축산물의 최소 25%를 가공·판매할 때는 이에 대한 직접세가 면제된다.³⁵⁾

34)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4

35) 상동

4) 사회적 경제 조직

(1) 리유니트

이탈리아의 농민들이 출자로 설립된 와인협동조합 리유니트 앤 치브(Riunite & Civ, 이하 ‘리유니트’)는 1953년 9개 양조장의 연합체로 출발하여 세계 4대 와인협동조합 중 하나로 성장해 왔다. 25곳의 양조장 연합으로 구성된 이러한 리유니트의 규모는 약 2천 600여명의 농민이 포도 재배에 참여, 연간 와인 생산량은 약 1억 1천만 병, 연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³⁶⁾

〈그림 3-4〉 리유니트 로고



자료: 오마이뉴스(검색일: 2018.11.15.)

세계 와인시장에서 리유니트의 와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요인에는 이윤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모두 공유하는 상호 신뢰 및 연대 기반의 협동조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영세한 규모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와인을 유통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개별 농민 또는 양조장

36) 연합뉴스 (검색일 : 2019. 01. 04)

들은 이윤과 손실을 모두 공유하게 되는 공동운명체로서의 협동조합인 이러한 리유니트를 설립하게 되고,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농민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 조합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리유니트의 성공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리유니트가 창출한 이윤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은 또한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는 포도밭 확장, 새 농기계 구입, 포도 품종 전환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같은 새로운 사업의 진출 등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동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은 나머지 수익금은 조합을 위한 재투자로서 이어져 와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³⁷⁾

(2) 카라박 프로젝트

이탈리아 볼로냐 시에서는 최근 협동조합 간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으로서의 카라박 프로젝트(Karabak Project)가 진행된 바 있다. 동 프로젝트의 특징은 개별 조합원들이 모여 협동조합이 구성되는 것처럼 개별 협동조합이 모여 협동조합 연합체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볼로냐 시 어린이 집 두 곳의 설립 및 운영을 시작으로 진행이 된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은 총 5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와 소치에타 돌체(Società Dolce), 급식 협동조합 캄스트(Camst), 건축 협동조합 치페아(Cipea), 설비관리 협동조합 메뉴텐코프(Menutencoop)로 이루어져 있다. 볼로냐 시의 유치원 설립 입찰 사업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이러한 개별 협동조합이 모여 카

37) 오마이뉴스 (검색일 : 2018. 11. 15)

라박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동 프로젝트는 이후 지역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당국과 협동조합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 프로젝트 조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⁸⁾

카라박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사업 및 운영방식 등의 각 과정에 있어서는 (i) 협동조합들의 역할 분담, (ii) 수익·비용 등에 대한 협동조합들의 공동 배분, (iii) 관할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건설비용의 경우 각 협동조합이 나누어 부담을 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부지와 어린이 운영과 관련된 지출 경비는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설립 이후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카디아이, 돌체, 메누텐코프가, 이 중 어린이들의 급식 부분은 캄스트가 맡아 진행이 된다.

개별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은 카라박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는 또한 금융 및 육아와 연계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이러한 개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교사 중 90% 이상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금융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편의를 우선순위에 두어 이른 아침(7시)부터 저녁(18시) 까지 11시간 동안 어린이들은 이러한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러한 카라박 프로젝트는 2005년에 첫 어린이집을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11개의 어린이 집이 확대·운영 중에 있다.

38)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2013, p. 146-147

3. 스페인

1) 사회적 경제 배경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이 그 배경이 되었다. 1923년에 255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스페인 최초 전국 규모의 협동조합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가톨릭 교리의 영향을 받아 동 교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었다. 1975년에 스페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불황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정부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³⁹⁾

2) 사회적 경제 법·제도

스페인은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기구인 사회적 기업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작성이 시도된 바는 있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규정·지원하는 공식적인 법적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한다.

먼저 전자인 협동조합의 경우 스페인은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의 근거로 헌법 제22조가 있고, 이는 연합체의 권리에 근거⁴⁰⁾하고 있으며, 후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987년 법률 제87호가 존재하나, 동 법률은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협동조합을 규정하거나 언급하지는 않는다. 또한 동 법률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9)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8

40) 헌법 제22조는 연합체의 규정과 규칙을 명시하고 있고, 모든 비영리조직은 물론 연합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 노동조합, 기업조직, 교회와 종교단체, 스포츠연맹, 소비자단체 등 그밖에 특별법이 규정하는 연합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협동조합 기업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건강관리·교육·문화 활동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기업(Social Initiative Enterprises)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⁴¹⁾

3) 사회적 경제 정책

스페인 연방정부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처는 고용 및 사회보장부이며 실무 담당 기구로 ‘자영노동,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국’이 존재한다. 동 실무 담당 기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원 사항에는 협동조합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의무 사항 완화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세율 경감 등이 있고,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일부를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충당할 경우 임금보전기금(Fondo de Garantía Salarial; FOGASA)⁴²⁾에 대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스페인에서는 사회적 기업·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i)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실직 상태에 있는 개개인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ii)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마련, (iii) 새로운 IT기술의 실행, (iv) 비즈니스의 통합, (iv) 전문성 교육 등이 포함된다.⁴³⁾

41)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28-30

42) FOGASA: 기업이 향후 근로자 임금에 체납 및 지급 불능에 대비해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기금

43)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30-31

4) 사회적 경제 조직

(1) 몬드라곤

스페인 바스크지역을 기반으로 한 몬드라곤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은 257개 기업과 조합에서 7만 4,000여명의 조합원이 일하는 연합체이자 세계 최대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2013년 기준 이러한 몬드라곤의 총 자산은 약 40조 원으로 기록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스페인 기업 순위 7위에 등록되기도 하였다. 석유난로 생산 직원들로 구성이 된 협동조합 ‘울고’에서 출발한 몬드라곤은 제조를 시작으로 은행, 경영 컨설팅,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 유통 등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왔으며, 자금력이 부족한 직원협동조합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동인민 금고’를 운영하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몬드라곤은 기술연구소 ‘이켈란’과 교육기관인 ‘몬드라곤 대학’ 등도 동 그룹의 산하에 두고 있다.⁴⁴⁾ 몬드라곤의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몬드라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림 3-5〉 몬드라곤 로고 및 홍보자료



자료 : Wharton 스쿨 홈페이지(검색일: 2019. 02. 20); 몬드라곤 홈페이지(검색일: 2019.02.20.)

44) 한국경제 (검색일 : 2018. 12. 11)

스페인내전 이후 피폐한 바스크 지역의 회복을 위해 호세 마리아 신부와 그 제자들이 만든 울고 협동조합을 시작⁴⁵⁾으로 오늘날의 몬드라곤 그룹으로의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주요 10대 운영 원칙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운영 원칙 중 '1인 1표주의'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 노동자들이 몬드라곤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러한 원칙하에 몬드라곤의 조합원들은 각 단위 조합에서 임기 4년의 조합장과 경영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대표들은 다시 그룹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경영진 및 감사 등을 선출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⁴⁶⁾ 몬드라곤의 설립 이전 유럽에서 이러한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 구축은 거의 시도된 바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는 대부분 기업 경영의 권한이 보통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영진에 의한 경영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몬드라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 왔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 시스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몬드라곤 그룹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창립 초기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매년 수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교육에 투자해 왔다. 동 그룹의 투자·지원으로 탄생한 몬드라곤기술대학은 현재까지 세계의 명문대와 교류하는 수준 높은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한 몬드라곤의 핵심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다.⁴⁷⁾

45) 제주의 소리 (검색일 : 2018. 12. 13)

46) 동아일보 (검색일 : 2019. 2. 21)

47) 동아일보 (검색일 : 2019. 2. 21)

〈그림 3-6〉 몬드라곤의 주요 10대 운영 원칙



자료 : 동아일보 홈페이지(검색일: 2019.02.21.)

(2) 라파제다

1982년 설립된 라파제다(La Fageda)는 전체 290여 명의 근로자 중 약 170여 명이 정신질환 환자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다. 동 기업은 초기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시작된 라파제다는 최근까지 스페인 유제품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는 등의 주목할 성과를 이루어 내며 낙농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림 3-7〉 라파제다 홍보 자료



자료 : UBC 홈페이지(검색일: 2019.01.19.)

정신의학을 전공한 라파제다 창업주 콜론 박사는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콜론 박사는 치료의 목적으로 이러한 환자와 함께 양털 골라내기·사기인형 칠하기 등 단순하지만 몰입하기 쉬운 일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낙농업 기반의 판매용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낙농업은 타 업종보다 공정이 단순해 이러한 환자들이 쉽게 업무를 익힐 수 있고, 또한 환자들이 생산한 유제품은 스페인 국내 시장에서 가격과 수요량에 큰 변동이 없어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가 있었다.⁴⁸⁾

라파제다의 사업운영에 있어 크게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에는 (i) 이윤 추구보다는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주목적이라는 점, (ii)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ii) 제품과 소비자 간 신뢰 구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포함된다. 먼저 정신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라파제다는 순환배치로 환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으로서 라파제다는 근로자들의 수익 일부를 회사에 재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자리의 순환적 창출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활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제품과 소비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동 기업은 치즈 및 우유 등 각 상품 군에 따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라파제다가 운영하는 목장 및 공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제조공정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해 왔다.

48)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 (검색일 : 2019. 01. 19)

4. 퀘벡(캐나다)

1) 사회적 경제 배경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출발점이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퀘벡(Quebec)주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의료·교육 중심의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 협동조합, 신용조합 및 자선기부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구가 활성화 되어 사회연대 기반의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경제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퀘벡지역이 주도적인 역할 모델로 성장하게 되었다.⁴⁹⁾ 이후 1995년에 접어들면서 14%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된 캐나다는 그 다음 해인 1996년에 퀘벡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대안을 사회적 경제에서 찾고자 한 것이 동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⁵⁰⁾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Fonds de solidarité des travailleurs’라는 1998년에 설립된 노동자 연대펀드(Workers Solidarity Fund)가 있다. 동 펀드는 퀘벡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 회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연금 펀드로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대한 투자기금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퀘벡의 경제 발전에 있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⁵¹⁾

49)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34-35

50) 프리미엄조선 (검색일 : 2019. 02. 15)

51)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36

2) 사회적 경제 법·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캐나다의 법률로는 연방협동조합법과 주협동조합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신규 사업을 통해 규모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규협동조합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 개발지원 프로그램(CDAP: Cooperativ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이 존재한다.⁵²⁾ 캐나다의 (연방·주)협동조합법은 1906년에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소비자 및 노동자 등으로 이루어진 퀘벡의 협동조합연합은 15개의 부문별 협동조합연맹과 11개 지역연합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3) 사회적 경제 정책

캐나다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닌 (퀘벡지역)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서는 첫째, 1996년 이후부터 시행된 세 제혜택 및 분야별 자금지원정책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 연구 및 교육 등의 분야에 퀘벡 주 정부의 자금(약 1억 3천만 달러)이 지원된 바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익창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주 정부는 2003년 구매 정보와 관련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비즈니스 교육과정 및 훈련프

52)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36-37, 재인용;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p. 3., 원문

로그그램을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캐나다의 지역사회발전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지원 제도가 실시된 바 있다.⁵³⁾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의 결과로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공동체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퀘벡의 사회적 경제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상티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퀘벡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티에 네트워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며, 퀘벡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1) 데자르탱 그룹

데자르탱 그룹(Desjardins Group)은 조합원 수 약 580만 명으로, 퀘벡 주민 약 70%가 가입한 금융협동조합이다. 최근까지 퀘벡과 온타리오 지역에서만 397개 금고(caisses)와 897개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⁵⁴⁾

데자르탱의 거버넌스 구조는 민주적 지배구조 및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금고는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과 조합원 연간 총회 등을 포함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조합원은 선거를 통해 금고 이사, 권역 위원회 대표, 데자르탱 그룹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또는 이러한 임원으로 선출된다. 또한, 개별

53)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37-39

54)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2013, p. 7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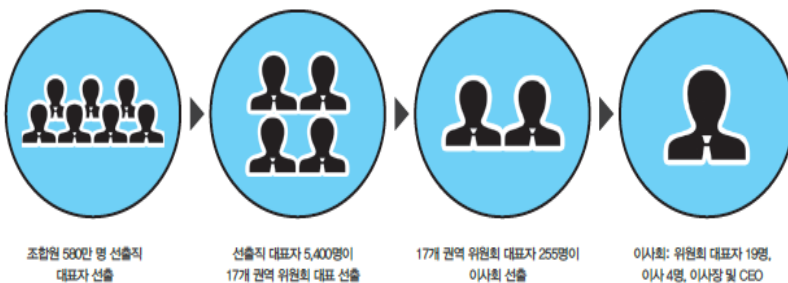
금고를 바탕으로 한 비례선출제 방식도 도입을 해 왔는데, 이는 각 금고 규모에 비례해 선출된 조합원 약 1,700명이 동 그룹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게 함으로서 조합원 참여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 3-8〉 데자르덴 로고(왼쪽) 및 본사(오른쪽)



자료 : Coop Canada 홈페이지(검색일: 2018.11.30.); Futurist 홈페이지(검색일: 2018.11.30)

〈그림 3-9〉 데자르덴 거버넌스 구조



자료: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2013, p. 72

데자르덴은 지역사회와 국내외 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금 마련, 후원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다. 2001년부터 퀘벡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협동조합기금(CRCD)을 마련해 왔으며, 2012년에는 이러한 기금을 주축으로 하여 퀘벡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추가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012년에는 후원, 파트너십, 장학금 등의 형태로 850만 달러 수준의 (재)투자가 이루어 졌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기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다운타운 데이케어 협동조합

“다운타운 데이케어 협동조합(Downtown Daycare Cooperative)”은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몽크턴(Moncton) 도시에 최초로 비영리의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⁵⁵⁾

〈그림 3-10〉 다운타운 데이케어 협동조합 홍보자료



자료: Stories.Coop 홈페이지(검색일: 2019.02.20.)

55)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2013, p. 80-81

다운타운 데이케어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i) 15개월~4살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ii) 4~5살을 아동을 위한 취학 전 프로그램, 그리고 (iii) 5~12살을 아동 및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프로그램의 참가비용 및 조건에 있어, (가족기준) 가입비는 일인당 20(캐나다)달러 수준이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대기조합원일 경우에는 사전에 30(캐나다)달러의 예약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돌보는 직원 또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등은 노동자협동조합인 퍼스트스텝 노동자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다운타운 데이케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 협동조합은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부모들이 제시하는 전망과 정책을 반영하고, 또한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 및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한다는 점이 기존 다른 어린이집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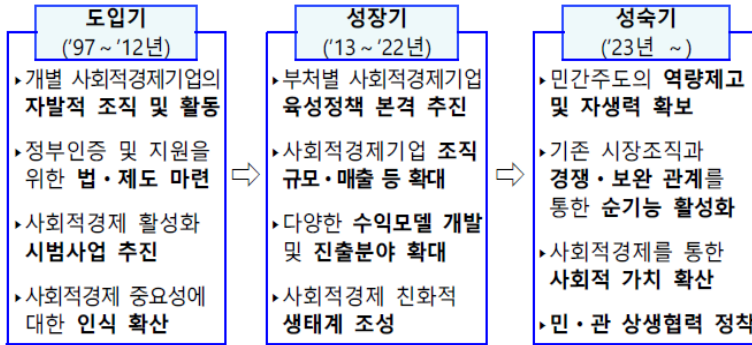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시작된 활동은 계, 두레 및 향약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후 이러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동은 국내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점차 조직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생산자공동체 협동조합 및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이 소비자 인권, 도시 빈곤층, 노동자들의 자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주도형·참여형 방식의 사업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⁵⁶⁾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구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오고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는 1997년에서 2012년까지의 도입기를 지나 2019년 현재 성장기에 진입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기 단계에서 향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추진전략에는 (i) 부처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정책의 추진, (ii)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 규모 및 매출 등의 확대, (iii)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 분야 확대, 그리고 (iv) 사회적 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이 포함된다.

56) 신윤천, 「사회적 경제의 이해」, 2015, 마케팅, 49(11), pp. 31-43.

〈그림 3-11〉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 p.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성장기 단계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4대 전략에 따라 먼저 주요 부처별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업·단체 중 이러한 추진전략의 방향성과 부합되는 주요 사례를 수산업·어촌 분야와 수산업·어촌에 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주요 부처별 정책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기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는 총 6개의 주요 부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부처 안에서도 세분화된 과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기구에는 농업 및 수산업 등을 포함한 분야별 법인, (협동)조합, 단체와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3-5〉 주요 부처별 사회적 경제 조직 및 근거 법령/지침

구분		사회적 경제 조직	근거 법령/지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법인, 조합, 단체 등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협법, 수협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센터,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법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장애인고용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자료: 수산·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도입에 관한 참고자료, 2018.04.16., 수산정책과 제공, 저자 재구성

또한 각 부처가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배경에는 주로 담당 부처에 따라 세분화 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뿐만 아니라 각 산업, 지역 또는 대상에 있어 농협법 및 수협법(산업),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지침(지역 또는 대상),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대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존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의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 법인, 조합 및 단체 등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경우에는 2019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주요 3대 정책을 제시·

이행해 왔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는 (i) 관련 분야 신직종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ii) 농촌조직에 대한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 도입, 그리고 (iii) 농촌 지역에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교육 및 채용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거주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그림 3-12〉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정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검색일: 2019. 4. 30.)

농림부가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주요 정책 중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정책은 그 이전의 해인 2018년의 주요 정책과 연속성을 띄고 있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농림부의 2018년도 주요 정책에는 융복합 산업, 농촌 관광 및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농림부의 2018년도 정책이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9개소의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에서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조사·평가해 왔다면, 2019년에는 이를 토대로 사회적 농업의 육성사업을 도입하여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림 3-13〉 농림부 2018년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정책

3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세한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발전체계 고도화 및 사회적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단위 네트워크/농촌융복합산업지구(누적): ('17) 25개소/16 → ('18) 38/20 → ('22) 92/36

구 분	현 행	개 선
융복합 산업	○청년 농업인의 참여 저조	○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로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
농촌 관광	○정부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차별화된 즐길거리 부족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사회적 농업	○일부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존재	○사회적농업 실천조작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9개소) 사회적농업 확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p. 9

2)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구 중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전반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로는 고용노동부를 들 수 있다. 2019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지역 주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 및 차별 없고 공정한 일터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등에 대한 주요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림 3-14〉 고용노동부 2019년 정책 추진 방향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2019. 01. p.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주요 방안은 주로 일자리 문제와 지역 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데에 주요 특징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소외)아동 및 치매노인 등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각 지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과, 부천 및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식- 방과 후 수업-등하원’ 서비스를 묶어 원스톱 형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 부처는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수산업·어촌 분야 주요사례

우리나라 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기구는 수협(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기구는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구 중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해양 생태계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중 바다의 향기, 아리울 수산 및 밸리스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3-6〉 수산 분야 주요 사회적 기업 및 특징

사회적 기업	특징
대동선가	친환경적 방법으로 국내산 수산물 가공
바다의 향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산물 가공
아리울수산	군산지역 특산물 박대를 이용한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울진바다소리	지역 고령인력 및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수산물 가공
국민농수산 영농조합법인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수산물 유통
포항녹색희망 자전거사업단	자전거를 통한 다양한 녹색제품을 개발·보급
농어촌정보화 전남협회	어촌 지역 컴퓨터 보급 및 교육 등의 정보화 사업
아라마린샵	요트 관련 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더 해피트리	해양 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화장품 제조
밸리스	해양 생태계 교란종 배스를 재료로 반려동물 영양제 개발 및 판매

자료: 현대해양 홈페이지(검색일: 2019.02.18.), 저자 재구성

1) 바다의 향기

전라남도 부안군에 위치한 바다의향기는 2011년 1월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동 기업은 김 등의 수산물 가공식품의 생산·판매에 의한 수익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으며⁵⁷⁾,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고

57) 바다의 향기 홈페이지 (검색일 : 2019. 02. 13)

용된 총 51명의 근로자 중 32명이 장애인, 그리고 9명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5〉 바다의 향기 조직도



자료: 바다의 향기 홈페이지(검색일: 2019.02.13.)

바다의 향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201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로 지정되었고, 다음해인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5년 동 기업은 15억 9,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 복지부장관에 의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⁵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그리고 매출액에 있어 동 기업은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수산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이다.

58) 중앙일보 홈페이지 (검색일 : 2019. 02. 13)

2) 아리울수산

아리울수산은 군산지역의 특산물인 박대를 원료로 한 수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이다. 동 기업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체장애인, 신용불량자, 다문화가정 및 고령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기반을 제공해 왔다.⁵⁹⁾

〈그림 3-16〉 아리울 수산 로고 및 주력 상품



자료: 아리울 수산 홈페이지(검색일: 2019.02.13.)

아리울 수산의 창업자(박금옥 대표)는 과거 자신의 시숙이 어릴 적에 즐겨 먹었던 박대묵⁶⁰⁾을 찾자, 이를 구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박대물을 만들어 시숙에게 제공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2012년 국내 최초의 박대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아리울 수산의 주력상품인 사랑해(海) 황금박대는 현대식 HACCP 시설, 지리적 표시제 및 품질인증 등 안전식품 생산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함으로써 최근 연 매출 20억 원을 올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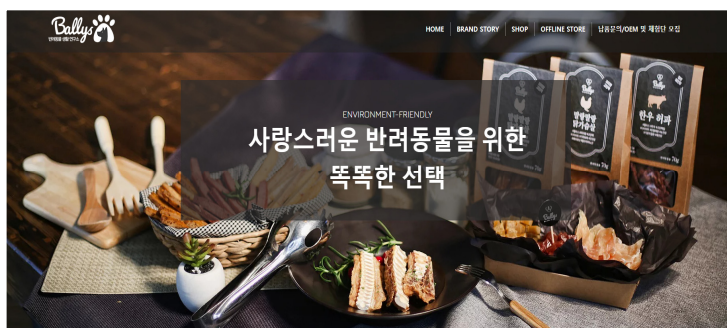
59) 푸르스스 홈페이지 (검색일 : 2019. 02. 11)

60) 박대묵은 박대 껍질을 말려, 이를 고아서 만든 음식

3) 벨리스

벨리스는 선순환적 업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외래어종 배스를 이용해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했던 서일대 벤처창업 동아리 팀이 동 어종을 이용한 펫푸드(Pet Food) 개발과 함께 2017년 5월 정식으로 벨리스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림 3-17〉 벨리스 홈페이지



자료: 벨리스 홈페이지(검색일: 2019.02.21.)

벨리스 대표(서정남)는 버려지는 배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업사이클링의 방식을 통해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타우린 보충제’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되는 연어 및 황태 등이 대부분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종들을 배스가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동 대표는 벨리스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배스의 영양 가치를 파악하게 되고, 동 어종을 수매해 가격과 신선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펫푸드를 제조하게 되었다. 배스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한 비린내로 인해 벨리스는 담당 제조업체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금 등을 통한 정부 지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게 되었다.

밸리스가 개발한 이러한 펫푸드 제품은 반려동물 이외에도 갈매기 모이용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 등 야생조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모습을 목격한 한 밸리스 관계자는 이러한 과자를 섭취한 갈매기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설사병이 발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환경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진화된 방식의 업사이클링 기법을 이용한 갈매기 모이용 제품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밸리스는 이러한 친환경 펫푸드 개발 및 환경 문제 개선 등에 대한 노력으로 2018년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정부 R&D 과제에 동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러한 밸리스의 주력상품으로는 (i) 배스를 활용한 반려동물 영양제, (ii) 초유를 활용한 반려동물 분말 및 사료, (iii) 딸기 등의 저상품성 농산물을 이용한 펫푸드(Pet Food) 등이 있으며, 동 기업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친환경 펫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8〉 밸리스 홈페이지



**01 배스를 활용한
반려동물 영양제**

국민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들어온 배스가 토종 어류의 개체 수를 감소시켰고,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통해 배스를 수매하지만, 폐기 처리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밸리스는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배스를 통해 내수면 어업계의 소득증대, 수매사업비와 폐기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개발하였습니다.



**02 초유를 활용한
반려동물 분말, 사료**

초유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출산한 뒤 3일 동안 나오는 우유로 일반 우유보다 영양분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초유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매년 40,000t 가량의 초유를 폐기하고 있어, 폐기 처리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 절차를 거친 안전한 초유로 밸리스만의 배합법을 통해 반려동물용 초유 분말과 사료를 개발하였습니다.



**03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PET FOOD**

같은 씨앗, 같은 성장과정, 같은 수확 과정을 거쳤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사과, 배, 딸기 등 다양한 과일을 동결건조한 반려동물용 동결건조 과일 칩을 제조하고 있으며 고구마, 당근, 호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Pet Foo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료: 밸리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9. 02. 21.)

제3절 시사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캐나다(퀘벡) 등 해외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지원정책은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유사하게 기존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기존의 지역 자생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독립적인 조직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기존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육성해 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농림부 및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한 부처별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정책과 상당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⁶¹⁾

두 번째,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이러한 지역 단체를 지원하는 비중에는 있어서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와 같이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는 정부 또는 외부의 지원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스스로 자원을 창출하고 생산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들 간의 연대가 형성되어 지역 내 자원을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체제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한 공유 체제와 함께 지역 내 문제점의 인식 또한 쉽게 공유될 수도 있었다.⁶²⁾

61)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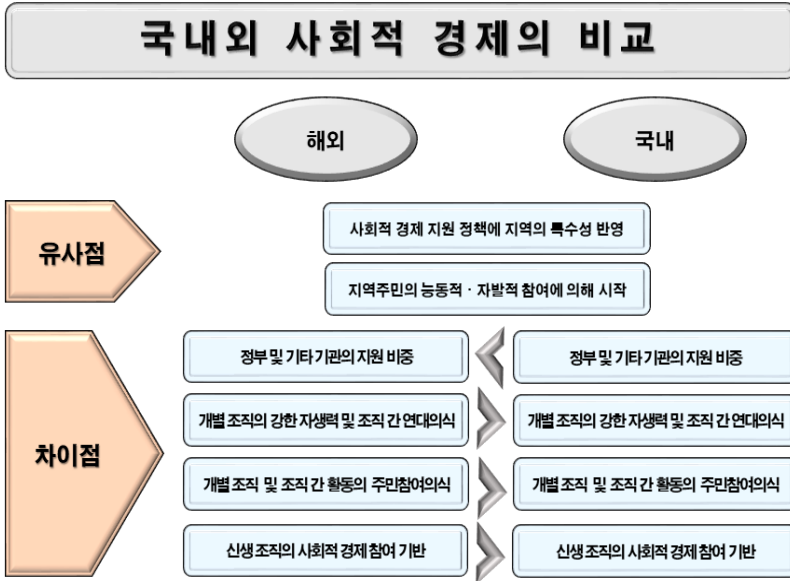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또는 외부 지원의 부재 하에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및 연대의식에 있어 그 발전이 미흡하다는 점은 해외의 사례와는 큰 차이를 두고 있다. 국내 벨리스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스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펫푸드 사업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사업 창출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장 설립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이었던 부분이 있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벨리스의 다양한 노력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또는 지역 사회와의 연대 참여 등과 같은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해외의 사회적 경제조직 간 활성화된 연대는 개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활성화된 연대는 아직까지 그 발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퀘벡 등에서는 지역 내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과정에 있어 기존 조직들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동 체계가 이러한 신생조직에게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정착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⁶²⁾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역 내에 정착하여 기반을 다져 왔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경험이 신생 조직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해외의 사례와 구별되는 또 다른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62) 상동

63) 최석현 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p. 42

〈그림 3-19〉 국내외 사회적 경제의 비교



자료 : 저자작성

2018년도 해양수산부의 업무추진계획에 있어 동 부처는 ‘연안·어촌의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2022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목표 아래 (i) 연안·어촌의 인프라 현대화 마련 그리고 (ii) 지역경제와 관광을 연계한 항만·어항 개발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한 3개의 핵심 정책사항에는 귀어·귀촌의 지원 강화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은 이러한 도시민과 청장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귀어·귀촌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해외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앞서 수산업·어촌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구 및 조직이 진입할 경우, 이들의 자생력 및 조직간 연대의식의 강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그리고 이들 조직 및 기구의 사회적 경제 참여 기반이 지역 내에서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지속가능성 또는 영속성은 정부의 제도와 지원 정책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시사한 바가 크다.

〈그림 3-20〉 2018년 해양수산부의 업무추진계획

③ 연안·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연안을 지역경제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
'18년	정책방향	◆ 연안·어촌 인프라 현대화 기반 마련 ◆ 지역경제·관광과 연계한 항만·어항 개발
	핵심정책	① 어촌 뉴딜 300 계획 수립·시행 ②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개발 ③ 귀어·귀촌 지원 강화(진입장벽 완화, 정착 지원 등)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p. 22

제 4 장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제약요인 및
가능성 분석

제1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약 요인

1.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1)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근거 부재

현재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으나 여러 쟁점으로 인해 입법화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자치조례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분야는 현행 법령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과 범위,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어촌계, 지구별수협의 사업의 내용을 준용해 본다면 어촌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형태로써 살펴볼 수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현재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유승민의원, 윤호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⁶⁴⁾」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⁶⁵⁾되고 있다. 첫째, 동 법안들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발전해 온 반면에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율성과 자립성이 낮고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동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입법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6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유승민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00161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27인)

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검색일 : 2018. 12. 21)

(3)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을 <표 4-1>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어촌사회의 핵심적인 지역공동체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사업은 교육·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보험), 후생복지,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등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과 후생복지 등 어촌사회에서 취약한 생활서비스와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로 지구별수협 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업 비교

구분	어촌계	지구별수협
교육 지원	- 교육·지원사업 -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 어업질서 유지 -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경제	-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 행사 -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 이용·제고 및 가공사업 -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신용	-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및 어음 할인 -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 조합원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공제		
후생 복지	-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 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장제사업 - 의료지원사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8. 12. 28)

(4) 지자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18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계획 수립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① 공유지 및 시설 등 지원, ② 경영지원, ③ 특례보증, ④ 우선구매 등 지원, ⑤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⑥ 사회적 기업의 날 지원, ⑦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⑧ 협력 및 연대사업

지원, ⑨ 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단위의 조례는 해당 지역과 예산규모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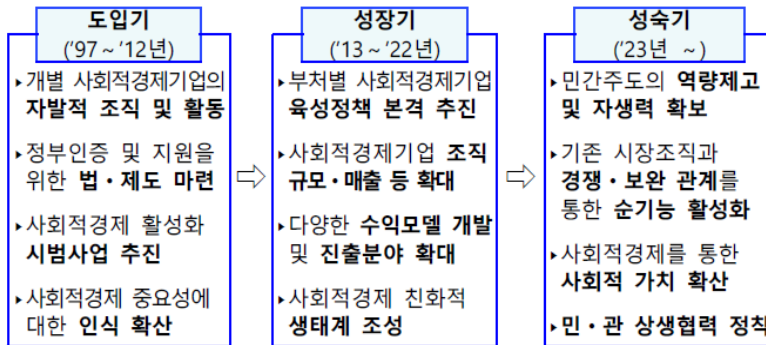
2)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취약성

(1)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부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산업·어촌분야에 대한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는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추진하고,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증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내실화를 다지는 단계로 민간주도의 자생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수산업·어촌분야는 범정부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끌려가는 측면이 아닌 수산업·어촌의 특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어촌형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앞서 추진되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4-1〉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 p. 5

(2)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저조

해양수산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는 어촌사회가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지구별수협 등 풀뿌리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으며, 협동과 연대,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풀뿌리 공동체의 역량과 사업규모 등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해양수산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책의 일환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3조 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촌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과 사업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금

까지 체계적인 풀뿌리 공동체 육성과 지원방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1) 지역공동체의 역량부족

어촌사회의 지역공동체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어촌사회의 지역소멸의 위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의 역량이 낮아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가. 인구감소

어촌사회의 인구는 2017년 기준 54,808가구로 121,73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0.8%, 3.1 감소하고 있다. 어촌사회의 인구감소는 높은 진입장벽 등 인구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자연감소가 진행되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어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조업 포기, 정부주도로 어선의 지속적인 감척사업 추진, 연안어장 매립 및 어장 소멸에 따라 경제활동의 기반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초고령화

어촌사회는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2040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도시어촌을 제외한 연안과 섬지역 어촌의 고령화율은 40%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어촌사회의 초고령화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마을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추진동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사회에서 평균연령이 60대 이상의 어촌마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외부의 참여를 통해 활력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표 4-2〉 어가인구 고령화율(2013~2017년)

(단위 : 천명,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15~'16	'16~'17
어 가 인 구	147,330	141,344	128,352	125,660	121,734	-2.1	-3.1
65세 이상	44,034	45,474	39,113	40,871	42,804	4.5	4.7
어가 고령화율(%)	29.9	32.2	30.5	32.5	35.2	6.7	8.1
농가 고령화율(%)	37.3	39.1	38.4	40.3	42.5	4.9	5.5
전체 고령화율(%)	12.2	12.7	13.1	13.5	14.2	2.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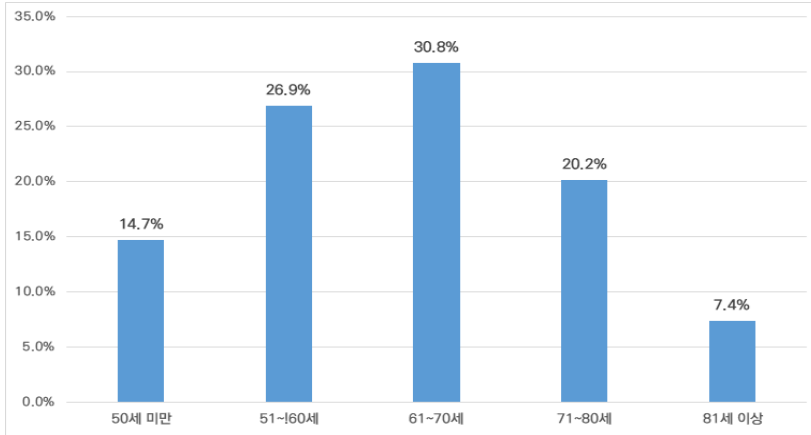
주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1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3~2017년(검색일: 2018. 12. 28)

(2) 어촌계의 연령분포

어촌사회를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어촌계의 연령대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1세 이상의 계층이 전체의 58.4%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세 미만의 계층은 전체의 14.7%에 불과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그림 4-2〉 어촌계 연령대별 분포 현황(2017년 기준)



자료: 수협중앙회, “2018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8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공익·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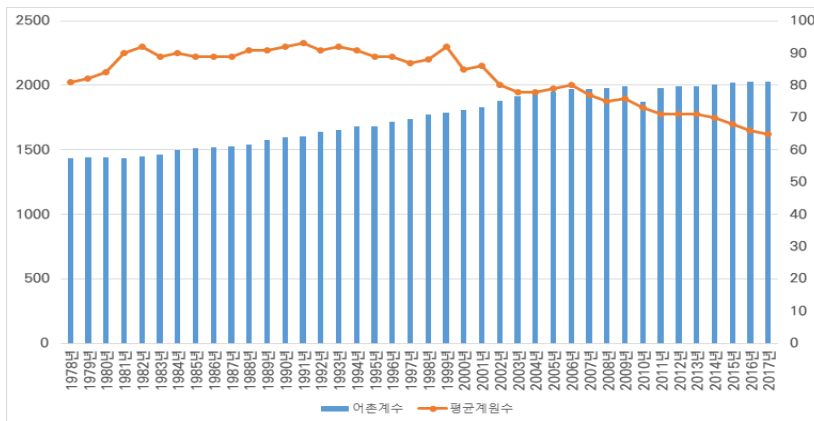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는 우리사회의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은 급속한 인구유출과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반면 어촌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사회적 가치는 크다. 어촌의 공익적·사회적 가치는 ① 수산물 공급을 통한 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 ② 문화여가 공간의 제공, ③ 국토의 안보 및 안전 대비, ④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보존, ⑤ 사회·경제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과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산업·어촌사회의 공익·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내외부에서도 부족하다.

3) 지역공동체의 갈등 문제

(1) 지역공동체의 분화

어촌사회 지역공동체의 핵심인 어촌계수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어촌계수는 1978년 1,436개소에서 2017년 2,029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어촌계 재인가 등 행정절차에 의한 요인으로 급감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촌계는 지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평균계원수도 1978년 81명에서 1991년 93명으로 정점으로 나타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6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어촌계수 및 평균계원수 추이(1978~2017년)



자료: 수협중앙회, “2018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p.4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지역공동체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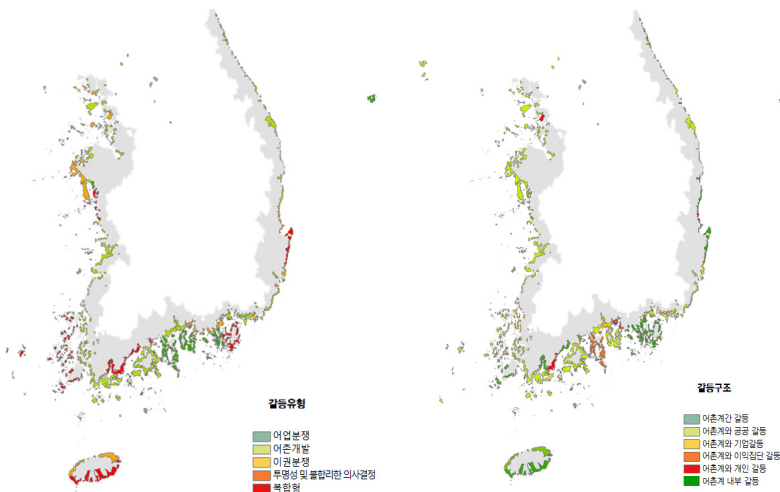
어촌사회의 지역공동체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간에 협력과 연대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우 외

(2014년)에 수행된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공동체의 갈등원인과 갈등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촌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원인은 어촌개발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동체 내외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권분쟁과 투명성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원인이 되는 갈등은 각각 25%, 17% 순으로 나타났다.⁶⁶⁾

한편, 갈등주체 간 관계구조는 어촌공동체와 공공기관 간 갈등이 5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촌공동체와 기업 간 갈등 13.9%, 어촌공동체 내부갈등 12.4%, 어촌공동체 간 갈등 9.3% 순으로 나타났다.⁶⁷⁾

〈그림 4-4〉 어촌공동체 갈등원인 및 갈등주체 분포현황



자료: 박상우 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pp.29~31.

66) 박상우 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p.29

67) 박상우 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p.29

제2절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가능성 분석

1. 어촌의 사회적 자본

1) 사회·경제·문화적 공동체

(1)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김대영 외(2016년) 연구에서 비교적 잘 정립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⁶⁸⁾

첫째, 공동체는 국가, 지역, 마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영역적 범주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속력과 사회적 자본은 지역적 영역, 범주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며,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다.

셋째, 공동체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데 공동체 내부에서 정서적 유대감은 상호 작용되며,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 공동체 내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2) 공동체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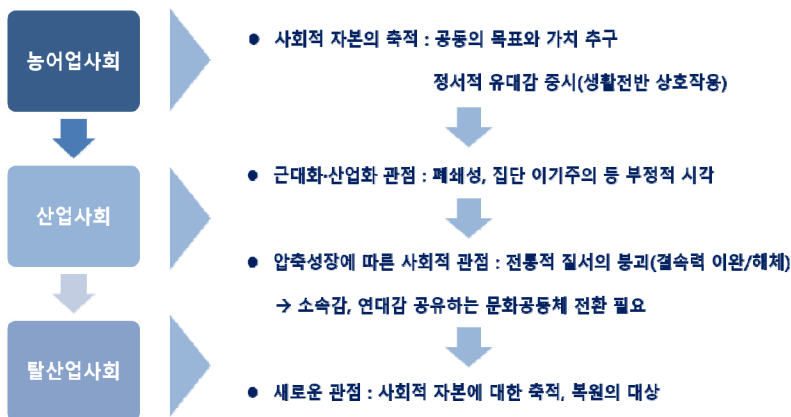
공동체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전통적인 농어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공동의 목표와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상대

68) 김대영 외,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16

적으로 높은 결속력이 작동되어 생활전반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는 농어업중심의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결속력과 공동의 목표는 약화되고 사익이 보다 우선시 되면서 공동체의 급속한 이완·해체의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산업시대의 효율성과 개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는 폐쇄성과 집단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가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 농어촌은 지속적인 쇠퇴와 해체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자본의 회복과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탈산업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사회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4>는 공동체의 인식변화를 농어업사회 → 산업사회 → 탈산업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정리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림 4-5> 공동체의 인식 변화



자료: 김대영 외, 여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19.

(3) 어촌공동체의 재조명

가. 전통적 어촌공동체

전통적 어촌공동체는 혈연·지연의 폐쇄적 공동체와 어업활동 중심의 경제적 공동체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먼저, 혈연·지연의 폐쇄적 공동체로서 어촌공동체는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배타성과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전통적 어촌공동체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입호제도와 마을어장의 총유와 공동이용의 관행이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⁶⁹⁾

전통적 어촌공동체는 혈연과 지연 등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인적 성향보다는 공동의 성향을 더 우선시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갖기도 한다.

나. 어촌공동체의 현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어촌공동체가 빠르게 이완·해체되면서 획일적인 생산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다양한 주체가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유연성을 지향한다. 특히,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가치도 동시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의 질서가 정착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배타성과 폐쇄성에 따른 구성원 간 의무이행과 상호 감시가 아닌 협력과 연대, 자율성과 책임성,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간다.

69) 김준, 「한국 어촌사회학」, 민속원, 2010. p.24

〈표 4-3〉 전통적 어촌공동체와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 비교

구분	전통적 어촌공동체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
가치추구	지역적 사회문화적 동질성 중시 단체적 성향에 초점	지역적 사회문화적 협력, 봉사 중시 단체적 활동과 병행하여 개인적 성향도 중시
경제활동 거버넌스	배타성 관 주도의 민관협력	협력, 연대 공동체 주도의 민관협력
확장성	마을단위 한정된 형태의 폐쇄적 구성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동체 간 협력 등 활성화
사업방식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공동체 스스로 선택

자료 : 김대영 외,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41

2) 어촌사회의 풀뿌리 지역공동체

어촌사회의 풀뿌리 지역공동체는 어촌을 과거부터 이끌어 온 어촌계(2,029개소)를 기반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953개소), 지구별수협(70개소) 등이 있다. 어촌사회의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촌계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행정 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어촌계는 전체 2,029개소 어촌계당 평균 마을 수는 2.44개, 어촌계원수는 13만 1,117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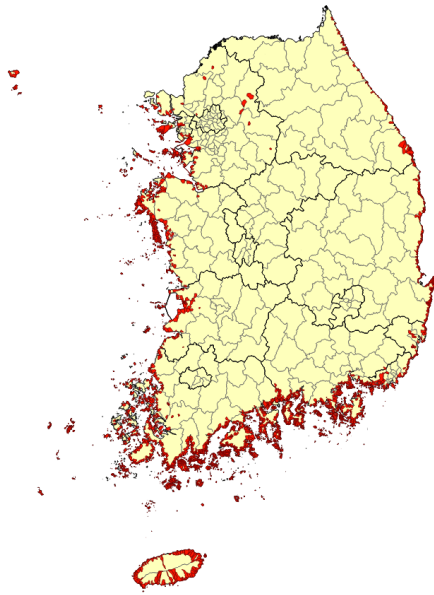
〈표 4-4〉 어촌계 분포 현황

(단위 : 개, %, 명)

구분	어촌계수	비율	어촌계원수	자연마을수	계당평균 마을수
계	2,029	100.0	131,117	4,959	2.44
경인	110	5.4	9,565	245	2.23
강원	74	3.7	4,337	981	13.25
충청	169	8.3	15,259	484	2.86
전북	64	3.2	6,734	368	5.75
전남	847	41.7	50,760	1,538	1.82
경북	153	7.5	6,754	209	1.36
경남	470	23.2	22,751	935	1.99
부산	41	2.0	2,992	52	1.27
제주	101	5.0	11,965	147	1.46

자료 : 수협중앙회, “2018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p.20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4-6〉 어촌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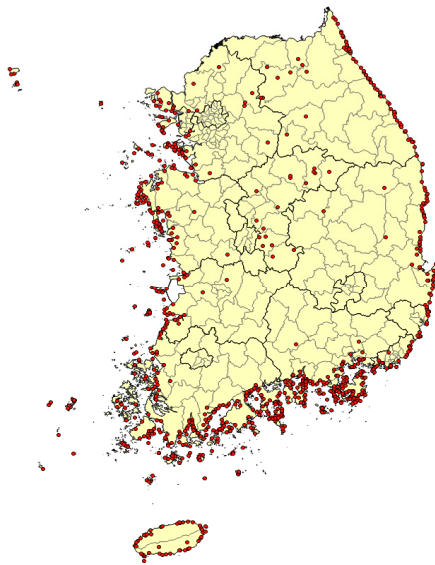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율관리공동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단위 또는 어구어법 등의 구성단위로 형성하고, 공동체는 마을어업형(최소 10명 이상), 어선어업형(최소 10명 이상), 양식어업형(최소 10명 이상), 내수면어업형(최소 5명 이상), 복합어업형(최소 15명 이상)으로 구분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구성하고, 어구어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업종별 수협, 어선주협회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구성한다. 2017년 기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953개소 전국 연안지역과 내수면에 분포한다.

〈그림 4-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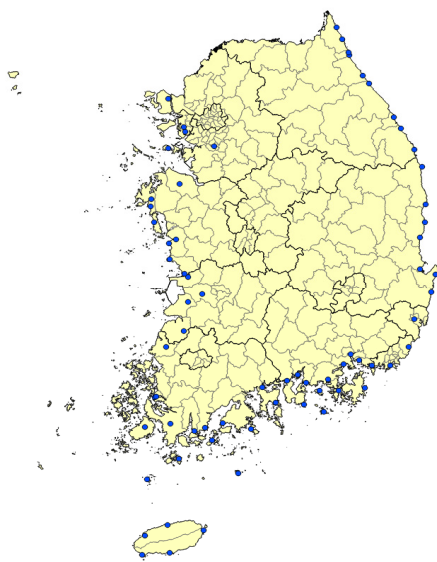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지구별수협

지구별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자재,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동체이다. 지구별 수협의 공간적 영역은 시군의 행정 구역에 따르며, 어업세력이 큰 일부 지역은 읍면단위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지구별수협은 70개소로 경인 5개소, 강원 9개소, 충남 8개소, 전북 4개소, 전남 14개소, 경북 8개소, 경남 14개소, 부산 2개소, 제주 6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며, 규모는 어업세력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4-8〉 지구별수협



자료: 저자 작성

〈표 4-5〉 지구별수협별 현황

시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수	인구	계원수
총계		2,029	2,969,849	131,117
경인	소계	110	943,909	9,565
	경인북부수협	23	122,585	927
	웅진수협	35	24,924	3,426
	인천수협	18	271,487	2,010
	경기남부수협	28	521,538	2,283
	영흥수협	6	3,375	919
강원	소계	74	104,139	4,337
	고성군수협	10	11,889	1,155
	동해시수협	6	35,975	358
	삼척수협	14	1,301	499
	원덕수협	5	1,099	241
	속초시수협	5	33,981	371
	양양군수협	13	3,834	330
	강릉시수협	13	12,436	891
	죽왕수협	5	2,443	282
	대포수협	3	1,181	210
충청	소계	169	74,046	15,259
	당진수협	8	6,620	2,002
	보령수협	30	11,345	3,455
	서산수협	53	25,637	4,167
	서천군수협	8	7,720	798
	서천서부수협	11	3,309	628
	태안남부수협	12	3,953	798
	안면도수협	44	9,544	2,711
	대천서부수협	3	5,918	700
전북	소계	64	413,981	6,734
	군산시수협	20	274,997	2,411
	김제수협	12	87,782	740
	부안수협	19	19,038	2,904
	고창군수협	13	32,164	679
전남	소계	847	271,647	50,760
	강진군수협	30	4,818	1,643
	목포수협	48	35,139	3,478
	신안군수협	71	41,710	2,759
	영광군수협	15	10,802	1,405
	완도금일수협	125	21,430	7,432
	완도소안수협	62	10,727	3,132
	진도군수협	56	10,298	3,109
	해남군수협	72	4,964	3,281

시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수	인구	계원수
	거문도수협	11	1,924	542
	고흥군수협	159	32,516	9,550
	나로도수협	21	3,546	1,374
	전남동부수협	30	9,023	1,694
	여수수협	105	74,961	8,325
	장흥군수협	42	9,789	3,036
경북	소계	153	186,603	6,754
	경주시수협	17	9,541	899
	강구수협	17	5,119	777
	구룡포수협	32	13,192	1,765
	울릉군수협	11	9,845	379
	죽변수협	17	9,718	646
	영덕북부수협	13	3,063	623
	포항수협	31	125,954	1,048
	후포수협	15	10,171	617
경남	소계	470	670,676	22,751
	거제수협	75	110,690	3,006
	고성군수협	26	12,206	1,295
	마산수협	21	317,584	1,305
	삼천포수협	21	14,137	1,341
	울산수협	33	61,450	2,262
	의창수협	14	31,648	1,824
	진해수협	14	3,315	988
	통영수협	84	66,079	3,260
	하동군수협	27	17,004	1,966
	남해군수협	106	19,327	3,582
	육지수협	18	1,738	448
	사천수협	9	2,517	573
	사량수협	14	1,597	564
	창원서부수협	8	11,384	337
부산	소계	41	26,724	2,992
	부산시수협	23	13,468	1,831
	기장수협	18	13,256	1,161
제주	소계	101	278,124	11,965
	서귀포수협	19	69,002	1,913
	성산포수협	13	20,408	1,099
	제주시수협	13	20,257	1,826
	추자도수협	33	151,022	5,066
	한림수협	5	1,791	347
	모슬포수협	18	15,644	1,714

자료: 수협, 2018 어촌계 분류평정(2017년 기준)

2.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1)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정비

(1) 생활 SOC 사업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에 19년 8.7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표 4-6〉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년 투자내용

(단위 : 조 원)

분야	10대 투자과제	주요 투자사업	투자규모
계	-	-	8.6
여가·건강 활동	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신규 140개소) -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50개소)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신규 473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신규 45개소)	1.1
	②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신규 7개소) - VR·AR 체험존(신규 6개 시설) - 어린이 과학관 설치(신규 4개소)	0.6
지역 활력	③ 취약지역 도시재생	-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추진(167개소)	1.3
	④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 (신규 70개소) -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신규 7개군) - 노후 상수도 정비(신규 28개소)	1.3
	⑤ 스마트 영농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신규 4개소)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신규 3개소)	0.1
	⑥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재생(펀드 조성 2,500억) - 정부지원 스마트 공장(신규 2,800개)	0.8
생활 안전·환경	⑦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1,200개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41개소)	0.4
	⑧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5만개)	2.3
	⑨ 미세먼지 대응 강화	- 도시바람길 숲(신규 11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60ha) - 수소 충전 인프라(신규 40개소)	0.2
	⑩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609개소) - 주택 태양광 지원(5.5만호)	0.5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 2018, p.6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관계부처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별 이행상황 점검 및 복합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 SOC 시설 복합화를 위한 문화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어촌의 현대화와 혁신과 포용을 아우르는 어촌·어항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부족한 어촌사회의 생활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복지(해양레저, 국민휴양)와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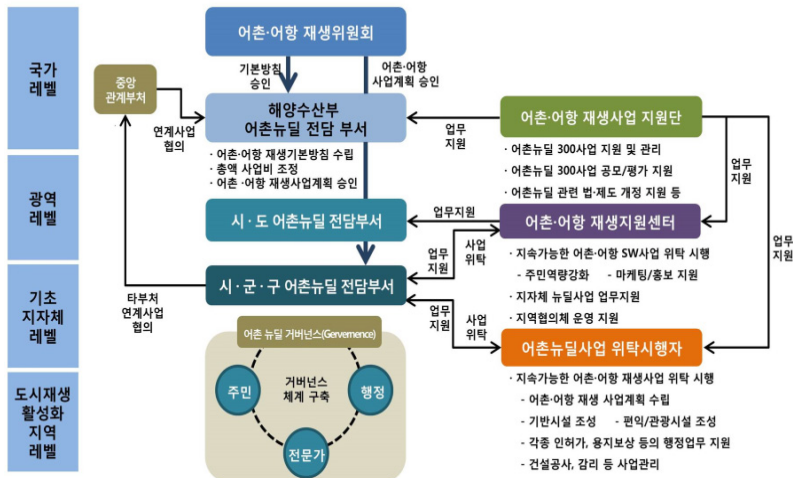
〈그림 4-9〉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모델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자료, pp.22~24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체계로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지역현안과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촌의 취약한 생활서비스(교육, 문화, 여가, 안전 등), 해양복지(해양레저, 문화관광, 역사문화 보전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로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구별수협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해결이 어려워 외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입·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4-10〉 어촌뉴딜 300사업 거버넌스(안)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자료,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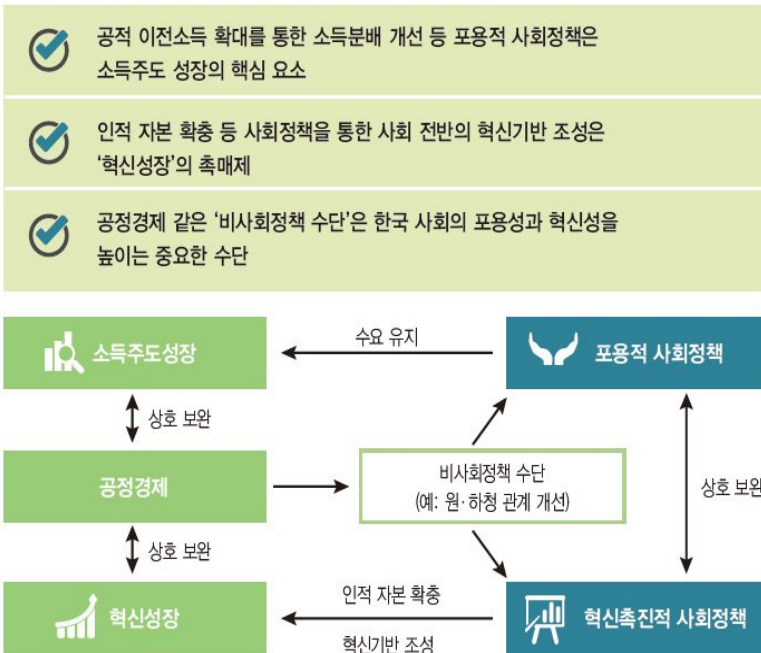
2)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 정책 시범도입

(1) 포용성장 정책 확대

문재인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기존 성장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와 같은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취약한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혁신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포용성장이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국정 아젠다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11〉 포용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자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14715&memberNo=25324157&vType=VERTICAL>(검색일 : 2018. 8.8)

(2)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적 수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과 9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4-7〉 사회적 수산업 추진계획(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추진방안	예산규모
계		528
사회적 수산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9개소 × 50백만 원 × 70%	315
사회적 수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9개소 × 10백만 원 × 70%	63
한국형 사회적 수산업 모델 구축	1식 × 150백만 원 × 100%	150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 지원”, 2018

제 5 장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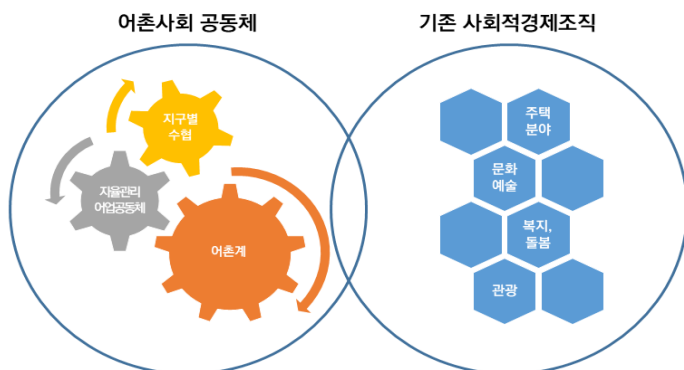
1) 추진방향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2017년)」,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등을 참조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i)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 ii) 간접지원과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iii) 민간·지자체 역할 경화, iv) 부처 간 협업 체계와 해양수산분야의 차별성 확보 등 4개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1)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과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유입 병행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어업공동체를 형성하여 발전해왔고, 현재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뿐만 아니라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영어조합법인 등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공동체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중심으로 어장의 이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생활규범과 결속력을 기반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어촌사회의 공동체 속성은 최근 농촌과 도시에서 신설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보다 역사성과 공동의 목표 및 축적된 연대·협동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은 어촌사회의 풀뿌리 공동체를 기반으로 육성하고 수산업·어촌에서 나타나는 지역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재생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술, 관광, 생활서비스 등 필요한 경우 기 설립된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어촌사회에 정착·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5-1〉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 및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유입 병행



자료: 저자 작성

(2) 간접지원과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원 의존성이 높아 생존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은 어촌사회의 풀뿌리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성 등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 and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과정에서 육성사업비 지원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의존성을 높이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생태계 구축을 마련하는데 정책방향을 두어야 한다.

(3) 민간·지자체의 역할 강화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도입단계로 초기 해양수산부 주도가 불가피하다. 다만 민관 합동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되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현장밀착형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4) 부처 간 협업체계와 해양수산분야의 차별성 확보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기 제시된 사회적 경제 육성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사회의 특성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현안문제 발굴과 그 해결방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어촌의 취약한 생활서비스 문제 등 낮은 삶의 질 문제를 어촌사회의 공동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발굴과 추진을 통해 어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i)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ii) 민관 협업체계 구축, iii)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7대 추진과제, 15개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2. 전략별 추진과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과제는 <표 5-1>와 같이 어촌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1〉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위계별 어촌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 어촌사회 풀뿌리 공동체 육성 - 거점단위 지역공동체 육성
	어촌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 설·운영 - 해양수산부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제도 마련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지원	- 어촌형 생활서비스 개선 - 로컬 씨푸드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국민 해양복지 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지정	-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 경영지원 -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 지정 및 인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1. 해양·수산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1) 어촌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크 및 활성화

(1) 위계별 어촌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가. 풀뿌리 어촌공동체(어촌계, 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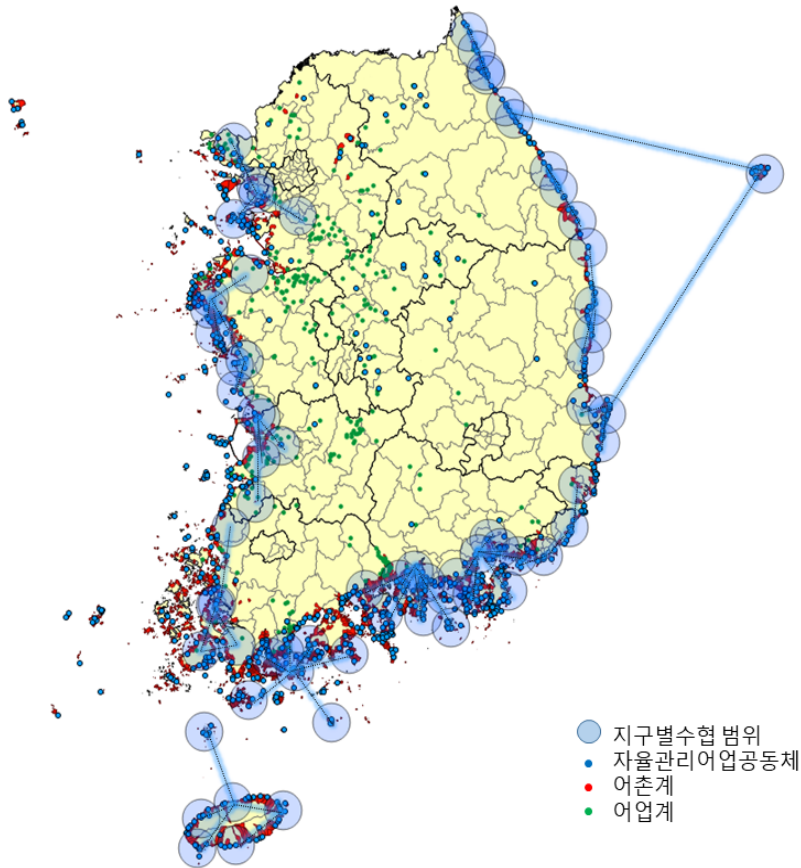
어촌사회 공동체는 해면과 내수면 등 공유수면 내 어업활동을 기
반으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환경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2017년 기준 어촌계 2,029개소, 어업계 377개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953개소가 상호 간에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촌계와 어업계는 각각 해수면과 내수면의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왔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000년대 이후부터 어촌계, 어업계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특정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된 지역공동체이다.

나. 거점단위 지구별수협

지구별수협은 어촌계, 어업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거점 공동체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구별수협은 전국에 7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수협은 통상 20개 내외의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고흥군 수협은 159개 어촌계, 완도 금일수협 125개 어촌계 등 지역에 따라서는 100개소가 넘는 대규모 지구별수협도 나타나고 있다. 거점단위 지구별수협은 어촌사회의 광역적인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권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어업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제주 한림수협의 경우 다목적 어업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소거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5-2〉 위계별 어촌형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가.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운영

어촌공동체는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여 왔으나 구성원의 고령화와 지역현안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존의 어촌공동체 운영방식으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포용성장 등 어촌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어촌계, 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 지구별수협, 지자체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협중앙회 연수원, 찾아가는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필요하다. <표 5-2>는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추진(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i) 지역재생(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추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필요성과 역할, ii) 사회적 가치 혁신, iii) 국내외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사례, iv)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조직 지정을 받기 위한 실무교육(매뉴얼), v) 해양수산부 정책 지원내용 등이 필요하다.

<표 5-2>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안)

구분	교육대상	역량강화 교육과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어촌계/어업계	- 어촌 지역재생(어촌뉴딜 300 등) 사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자율관리공동체	
	지자체 공무원	- 사회적 가치 혁신 정책
수협연수원	어촌계/어업계	- 국내외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사례
	자율관리공동체	- 사회적 경제조직 지정을 위한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 (해수부, 수협 유관기관 홈페이지)	어촌계/어업계	- 해양수산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내용
	자율관리공동체	- 국내외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사례
	지자체 공무원	-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운영 매뉴얼
	일반인	

자료 : 저자 작성

나. 해양수산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제도 마련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과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제도 방안으로 제시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절차(안)

절차	주관기관	내용
① 인증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 연간 인증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상담 및 컨설팅	전담기관	-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③ 인증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 전담기관에 신청서 제출
④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전담기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⑤ 현장실사	전담기관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전담기관)
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천	전담기관 ↔ 해수부 광역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 한 대상중에서 추천 가능
⑦ 검토보고자료 제출	전담기관 ↔ 해수부	-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자 료를 해수부로 제출
⑧ 인증심사	해양수산부	-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 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 경제조직 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심의
⑨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해양수산부	- 해수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기업 업무지침」, 2018, p.30.

(3)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지원

가. 어촌형 생활서비스 개선

지구별수협을 중심으로 어촌지역 취약한 생활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어업인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어촌형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을 일으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5-3〉은 제주 한림수협의 어업인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어촌사회에서 취약했던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를 선순환 구조로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림수협은 다목적 복지센터에 마트, 수산시장, 금융, 교육공간, 다목적 문화여가 공간, 어업인 사우나실 등 지역사회의 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한림항 내 어항구에 마련하고, 주변의 어촌 마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1층에서 도입하는 마트, 수산시장, 수협금융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교육센터, 사우나실, 다목적 공연장 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구별수협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새로운 사업의 영역과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 제주 한림수협을 통한 어촌의 생활서비스 개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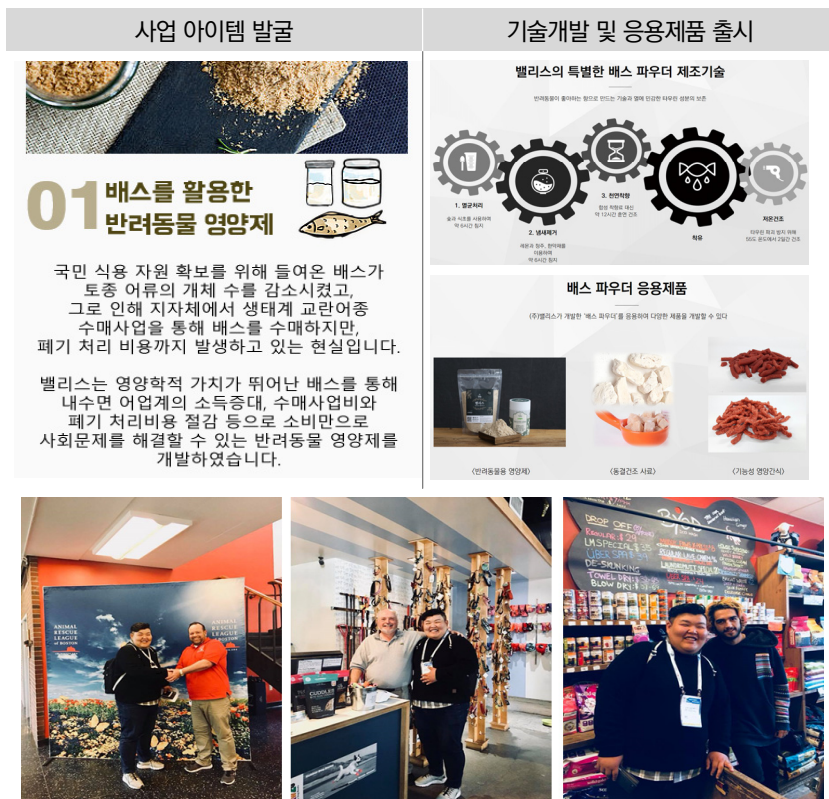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로컬 씨푸드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 등에 해결방안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벨리스는 도시청년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부 예비지정을 받고 베스 등 유해 외래어종으로 구제사업과 환경 처리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사료개발과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의 환경문제와 청년일자리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림 5-4〉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자료: 벨리스 홈페이지(검색일: 2019. 02. 21),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2018)

2) 타 부처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기회 확대 지원

생활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연안·도서지역에 분포하는 어촌은 도시와의 이격성으로 인해 복지·교육·문화 등의 사회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제한된 공공서비스 인력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낮은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게 된다. 어촌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문제는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촌의 지역재생 과정을 통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개선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능력은 재정 및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복지·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어촌지역의 제한된 노동시장 및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업종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청년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어촌 지역재생 활성화와 삶의 질 측면의 성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생활서비스 공급주체를 사회적 경제조직과 같이 공공성을 지닌 민간조직으로 다양화할 경우 어촌지역 생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어촌 지역재생 지원



자료 : 저자 작성

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 지원

1)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정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도입기로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간에 체계지원 지원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양수산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전담기관을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전문지원기관 지정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수산분야 출연연구기관 또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⁷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연안 10개 시도에 지정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조직 전담기관 간 연계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0조⁷¹⁾ 규정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7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함

7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둔다.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전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상호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1) 경영지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기존 어촌계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또는 육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의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갈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이 폭 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수산업·어촌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등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산분야의 특성상 지역·업종별 어한기를 특정하여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육성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사회적 경제조직 지정 및 인증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또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 수요조사와 예비 인증과 지정 등 행정적인 업무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현장실사 등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향후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에 구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선구매를 지원토록 한다.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

〈표 5-4〉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안)

구분	역량강화 교육과정
정부조직법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자료 : 저자 작성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3건으로 각론을 제외하고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배제 심화 등 기존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구조적인 해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육성법」 제정과는 관계가 없이 <표 5-5>와 같이 수산업·어촌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등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수산업·어촌에 사회적 경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표 5-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 2(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어촌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저자 작성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어촌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6차산업화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특화발전을 통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5>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5-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향

현행	개정안
제28조의 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좌동 4. 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 교육훈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 5.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료 : 저자 작성

(3) 농어업인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5장을 신설하고,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급 등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5-7〉 삶의 질 법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설방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 경영지원 등
	제42조 교육훈련 지원 등
	제43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44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5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급

자료 : 저자 작성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각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의 국가 등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주도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인 수산자원 및 연안공간을 이용하는 사회·경제·문화적 공동체 및 풀뿌리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고 산업적·지역적 특성상 사회적 경제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활동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한 축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산업·어촌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어촌고용 증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평한 소득분배 등 ‘나보다 우리를’,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종합계획 및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및 어촌분야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축적된 공동체와 연대의식 등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과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조기에 정착·확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유형별 선도모델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도출로 정책추진 당위성과 예산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본 연구는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과 잠재성을 토대로 정책화의 시급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 간 중장기 로드맵으로 비전, 목표,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i) 추진체계 구축(국가, 지자체, 민간 등 주체별 역할,

제도), ii)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네트워크, 기금조성, 인재 양성), iii) 시장 확대, iv) 지원방안, v)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시범사업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대표적인 사업유형과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유형은 수산업·어촌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도입으로 성과도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i) 어촌사회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ii) 고령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iii) 어촌형 복지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어촌사회는 부족한 공공서비스 SOC로 삶의 질 여건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니즈는 높지만 낮은 인구밀도와 적합한 운영관리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촌사회의 지역현안으로 공공서비스 문제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림 6-1〉의 일본 도쿠시마현 고야다이라지구와 제주 한림수협이 다목적 어업인복지센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은 지역의 혁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도쿠시마현 고야다이라지구는 인구감소와 열악한 생활 SOC 문제를 폐교된 중학교에 의료, 소매점, 행정, 여가시설을 소규모로 집적화시키는 소거점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변의 농어촌마을 간 마을 버스 운영을 통해 생활서비스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지역 지구별수협(한림수협)에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열악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목적 어업인복지센터 인프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마련하고, 수협이 마트, 금융, 수산시장 등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교육, 문화여가, 복지(사우나) 등 어업인과 지역 사회에 선순환적인 구조로 운영관리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지구별수협이 어업인 이외에 한림읍의 지역주민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거점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림 6-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일본 도쿠시마현 고야다이라지구 사례	제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복지센터 사례
BF : 소방분소(대피실) 1F : 진료소, 약국, 우체국, 소매상점 등 2F : 시청 행정지소, 치과진료소 등 3F : 공민관(회의실, 도서실, 조리실) NPO 법인사무실 등	1F : 수협 마트, 수협은행, 수산시장(관광객), 활어워판장 등 2F : 세미나실, 외국인교육센터, 사무실 등 3F : 다목적 공연장 4F : 어업인 사우나실
 旧木屋平中学校	

자료 : 저자 작성

(2) 고령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수산업 쇠퇴와 맞물려 어업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고령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마련되지 못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림 6-2〉는 거제 해금강마을 고령자 취약계층과 벨리스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6-2〉 고령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거제 해금강마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례



(주)벨리스 수산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자료 : 저자 작성

거제 해금강마을은 동백군락지로 버려지던 동백열매를 활용하여 화장품, 수공예 기념품,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백열매를 수거하는 과정은 마을 내 고령자 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마을사업 참여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화합과 일자리 복지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벨리스는 도시청년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영양제와 간식 등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이를 통해 11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수산창업의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표 6-1〉 거제 해금강마을 및 밸리스 일자리 창출 내용

기업명	사업내용	매출 및 고용
거제 해금강마을	(1) 사업모델: 마을의 동백열매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 제조, 가공하고 체험판매 (2) 사회적 목적 : 마을 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3) 영업활동 동백 화장품 및 기념품 제조, 동백공예품 체험만들기	동백 수거 70명 기념품 8명 판매 3명
(주)밸리스 (인천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형	(1) 사업모델: 생태계 교란어종 배스로 반려동물용 영양제 개발 및 판매 (2) 사회적 목적 ① 환경보호: 폐기처분되는 배스를 업사이클링하여 폐기물 감소에 기여 ② 세금절약: 춘천, 화천, 양구 등 지자체와 MOU를 맺어 세금을 들여 폐기하는 배스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폐기비 용 세금 절감 (3) 영업활동 반려동물 용품점,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오프라인 판매 점을 통한 판매진행, 자체 판매 사이트(스토어팜)와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동시 진행	10억 규모 / 11명

자료 : 저자 작성

(3) 어촌형 복지사업

어촌형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공동체가 스스로의 복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치 실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충남 만수동 어촌계는 고령화되어 가는 어촌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마을어장 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촌계 상생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귀어인을 적극 유치하고, 어촌계원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례는 어업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의 고령어업인들에게 연 500만 원 규모의

연금을 지급하고, 이들 대신 젊은 층의 귀어를 유입시켜 어촌계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도입 이후 만수동 어촌계는 귀어인들에게 바지락 채취 기술 전수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총 18명이 귀어하여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충남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상생연금제도 사례



자료 : <https://blog.naver.com/taeanblog/221225234582> (검색일 : 2019.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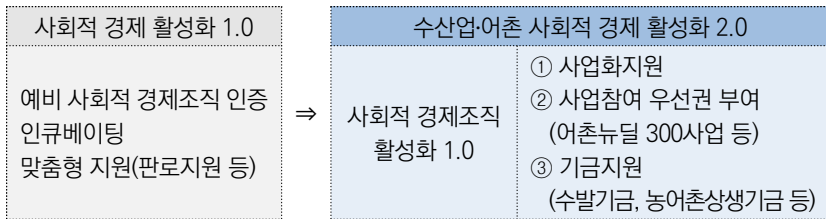
- ▶운영 : 어촌계원이 공동어장 생산수익(30%)을 수혜자(18명)에 균등지급
(연간 1인 약 5백만 원 수혜)
※ 어촌계원 총96명(어업활동78, 수혜18), 주요소득(패류) : 바지락, 굴 등
- ▶수혜 : 80세 이상(희망자), 장기입원 등 자력 수익활동 어려운 어촌계원
- ▶갈등 : 사업초기 시행 반대(다수 계원이 무노동무수익 원칙 제기 등)
- ▶해결 : 이해설득(노년에 수혜)→ 인식개선(고령화)→ 세대간 갈등완화 → 성공적 운영
※ 한정된 어장내 과다인원 해소(어장휴식령제→ 품질향상, 전량수출로 수익향상)

2.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추진

범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각 부처별로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인큐베이팅,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어촌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사업은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에서 더 나아가 협의체 구축, 인증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화지원(전환-육성), 사업참여 우선권 부여(유입), 기금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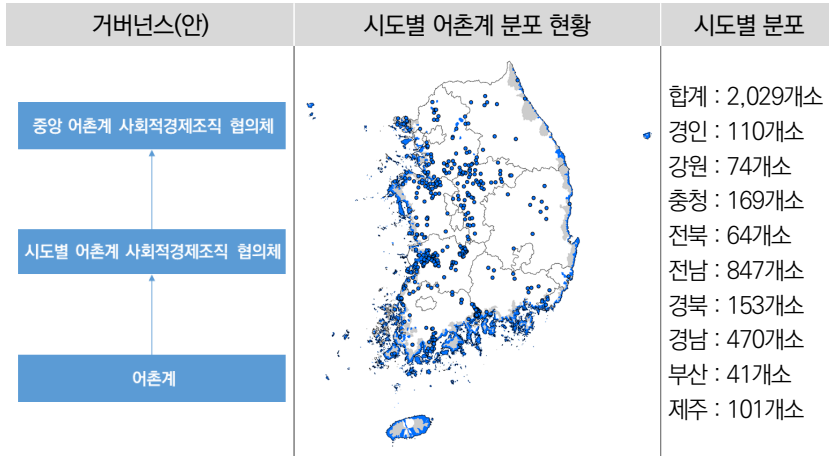
〈그림 6-4〉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1)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협의체 구축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협의체는 전국어촌계협의회, 전국자율관리공동체 등 어촌사회의 풀뿌리 공동체와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지역과 특성별로 어촌계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육성하는 기반으로 역할을 한다. 특히, 협의체는 비법인 어촌계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현안발굴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5〉 시도별 어촌계 분포



자료 : 저자 작성

2) 예비 인증 및 인큐베이팅 지원

해양수산부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예비 인증제 도입과 어촌계 사회적 경제 조직화, 초기 소규모 사업자금 인큐베이팅 지원 등을 지원하여 사업방향과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과 같이 획일적인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비 인증과 인큐베이팅 지원은 어촌계 등 어촌사회의 풀뿌리 조직을 우선적으로 전환, 육성하고, 필요 시 외부의 사회적 경제조직도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6〉 어촌계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인증 및 인큐베이팅 추진절차



자료 : 저자 작성

〈표 6-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절차(안)

절차	주관기관	내용
① 인증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 연간 인증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상담 및 컨설팅	전담기관	-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③ 인증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 전담기관에 신청서 제출
④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전담기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⑤ 현장실사	전담기관	-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전담기관)
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천	전담기관 ↔ 해수부 광역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대상중에서 추천 가능
⑦ 검토보고자료 제출	전담기관 ↔ 해수부	-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자료를 해수부로 제출
⑧ 인증심사	해양수산부	-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 하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 경제조직 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 심의
⑨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해양수산부	- 해수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기업 업무지침, 2018, p.3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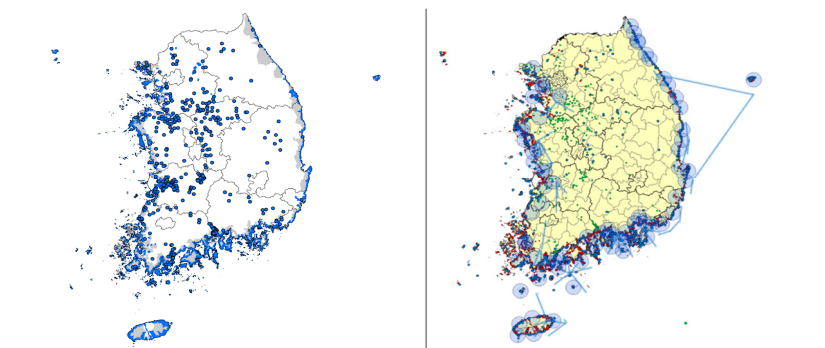
3) 사업화 지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사업 및 어촌개발사업 등 마중물 사업 주체로서 사업참여 우선권 부여로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환, 육성,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강마을 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해양수산사업의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고, 사업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전국망 네트워크 구축

어촌사회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해면과 내수면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경제가 어촌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29개 어촌계, 70개 지구별수협 등 공간적인 위계에 따른 네트워크로 이러한 전국망 네트워크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상호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6-7〉 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전국망 네트워크



자료 : 저자 작성

4.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 교육

(1)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는 개념, 추구하는 가치와 실현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어촌사회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계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육성에 필요한 사전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과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집체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협연수원 등 유관기관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은 다수의 어촌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와 대한 이론과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에 따른 체크리스트, 단계별 매뉴얼 교육, 소개 등을 단기간 내에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외 수산업 및 어촌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조직 전진대회

수산업·어촌분야의 사회적 경제가 정착되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평가선정하고, 우수마을 포상 등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수산분야와 어촌사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적된 어촌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2019.
- 고용노동부, 「사업기업 업무지침」, 2018,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 김대영 외,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김준,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2004.
- 김태완 외, 「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합동조사단 국외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희재, 「어촌계를 통해서 본 어촌문화의 재발견」, 동북아문화연구 제46집, 2016.
- 관계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 2018,
- 남승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성남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6(4), 2016.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2018.
- 농림축산식품부·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2017. 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 연구」, 2011.
- 농림수산식품부, 「일선수협 발전과 연계한 어촌계 선진화 방안 연구」, 201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2018
- 박경철·김종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 충남발전연구원, 2013.

- 박상우·이승우·이호림,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 박상우·류정곤·황재하·이상규,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알아보기: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2013.
- 수협중앙회, "2018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8.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2009.
- 신윤천, 「사회적 경제의 이해」, 마케팅, 49(11), 2015.
- 안전행정부, 「사회적 경제 공동체 지원체계 진단」, 2013.
- 유승민의원 대표발의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616), 2016, 10., 11
- 이철선, "해외 3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분석을 위한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 장원봉,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 제409호, 2015.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2015.
- 최석현·김희연·이재광, 「경기도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2013. 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2011. 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제3차년도)」,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수산업·어촌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2018.
- _____,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2018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산·어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도입에 관한 참고자료", 2018. 04. 16.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사회적 수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_____,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자료", 2018.

행정안전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진단」, 2017. 12.

〈국외 문헌〉

Defourny & Nyssens,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Defining social enterprise*, M. Nyssens(ed.), NY: Routledge, 2006.

Noya A. & Clarence E., *Improving social inclusion at the local level through the social economy*, working document, CFE/LEED 9/REV1, OECD, 2008.

OECD,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the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rogramme, 2007.

〈인터넷 자료〉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gojumin.go.kr/new/bbs/board.php?bo_table=vmk&wr_id=81 (검색일: 2019. 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검색일: 2019. 1. 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검색일: 2018. 12. 21.)

국제노동 브리프 홈페이지, http://dl.kli.re.kr/dl_image/IMG/01/000000001305/SERVICE/000000001305_01.PDF (검색일: 2019. 1. 15.)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008>(검색일: 2019. 1. 15.)
-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news.donga.com/3/all/20020714/7842409/1>(검색일: 2019. 2. 21.)
- 몬드라곤 홈페이지, <https://www.mondragon-corporation.com/en/>(검색일: 2019. 2. 20.)
- 바다의 향기 홈페이지, <http://www.xn--ok0b52guvjwvl9mr.kr/html/intro02.html>
(검색일: 2019. 2. 13.)
- 밸리스 홈페이지, <https://www.xn--oy2bp0c72i.com/>(검색일: 2019. 2. 21.)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coopcenter&logNo=22086125590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검색일: 2018. 12. 22.)
- 세계도시뉴스 홈페이지, https://ubin.krihs.re.kr/ubin/mobile/wurban/maincitynews_view.php?no=1539
- 아리울 수산 홈페이지, <http://gold-fish.kr/index.html>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707598>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467
-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3448>(검색일: 2018. 12. 13.)
-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news.join.com/article/20491880>(검색일: 2018. 2. 1.)
- 태안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eanblog/221225234582>(검색일: 2019. 1. 15.)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3~2017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8/6/index.board(검색일: 2018. 12. 28.)

프로세스 홈페이지, <https://ppss.kr/archives/146641>(검색일: 2019. 2. 11.)

프리미엄조선 홈페이지,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1/2015111101507.html(검색일: 2019. 2. 15.)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1232.html(검색일: 2019. 1. 15.)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81724711?nv=o>(검색일: 2019. 12.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검색일: 2018. 12. 27.)

현대해양 홈페이지,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4>(검색일: 2019. 2. 18.)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검색일: 2019. 1. 12.)

CES 홈페이지, <http://cenergysolutions.org/>(검색일: 2019. 12. 16.)

Coop Canada 홈페이지, <https://canada.coop/en/news/desjardins-group-completes-acquisition-state-farm-canadian-operations>(검색일: 2018. 11. 30.)

Futurist 홈페이지, <https://www.futuristarchitecture.com/43564-desjardins-group-headquarters-an-architectural-approach-combining-historical-value-and-modernism-of-desjardins.html>(검색일: 2018. 11. 30.)

NAVER 포스트 홈페이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14715&memberNo=25324157&vType=VERTICAL>(검색일: 2018. 8. 8.)

Redian 홈페이지, <http://www.redian.org/archive/9527>(검색일: 2018. 12. 22.)

Scotland Alba 홈페이지, <https://www.visitscotland.com/info/see-do/isle-of-skyye-ferry-community-interest-company-p1855141>(검색일: 2018. 12. 16.)

Stories.Coop 홈페이지, <http://stories.coop/cooperatives/downtown-daycare-co-operative/>(검색일: 2019. 2. 20.)

UBC 홈페이지, <https://blogs.ubc.ca/sustainablemarketingabello/2016/03/31/la-f>

ageda-a-business-helping-the-community/(검색일: 2019. 1. 19.)

Wharton 스쿨 홈페이지,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the-moondragon-cooperative-gives-lessons-in-democracy/>(검색일: 2019. 2. 20.)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률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행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수산업·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 2019년 07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07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영진 P&P (02-734-3713)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